

KINU 연구총서 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 황선영

KINU 연구총서 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 황선영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예원기획 (02-745-8090)

ISBN 978-89-8479-735-2 93340

가 격 ₩6,00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ix
I. 서론	1
II. 사회변동과 혁명	7
1. 사회변동과 혁명이론	9
2.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	15
III. 동유럽 체제전환	25
1. 폴란드: 노동자 중심형	28
2. 체코슬로바키아: 반체제 지식인 중심형	33
3. 헝가리: 당내 개혁파 중심형	36
4. 루마니아: 민중봉기형	42
IV. 동유럽 체제전환의 북한 시사점	47
1. 경제위기	49
2. 시민사회	53
3. 종교	58
4. 불평등의 확산	60
5. 외부 정보의 유입	62
6. 체제 신뢰	6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V. 북한사회의 위기구조	71
1. 식량배급제 외해	73
2. 사회갈등구조	83
3. 권력구도 재편의 영향	89
VI. 북한사회변동 전망	101
VII. 결론	117
참고문헌	1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7

표 목 차

<표 II-1> 사회변동의 분석 수준	10
<표 II-2> 집합행동(사회운동·혁명) 이론의 분류	14
<표 II-3> 집합행동(사회운동·혁명) 분석의 두 가지 시각	15
<표 III-1>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 국가별 특징	46
<표 IV-1> 북한주민의 외부 라디오 청취율조사	65
<표 V-1> 차등적 식량배급제	75
<표 V-2> 1990년대 중반 지역별 배급 감량 및 중단시점	77
<표 V-3> 북한시장의 변천 과정	78
<표 V-4> 식량 생산량에 따른 배급량	81

그림 목 차

KINU 연구총서 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그림 VI-1> 욕구만족과 혁명	107
--------------------------	-----

요 약

사회변동과 혁명

미국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혁명이론의 전개과정을 볼 경우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골드스톤은 혁명이론의 전개과정을 3세대로 구분한다. 1900년에서 1940년 사이가 1세대로 혁명이론의 일반이론화보다는 혁명의 개별적 유형에 관심을 가졌다. 1940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2세대 시기에는 혁명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임으로써 혁명이론이 활발하게 성장한 시기에 해당한다. 3세대 혁명이론가들은 2세대 혁명이론이 간과한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적 갈등, 발전과 근대화 그리고 인류학 및 농민연구 등의 명제들을 혁명연구에 도입했다. 스키치폴은 혁명이론을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 집합심리학적 이론, 그리고 정치갈등 이론, 체계·가치합의 이론 등으로 분류했다.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반하는 혁명과 집합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대부분 봉건체제의 해체와 근대사회의 등장, 산업화와 사회주의체제의 등장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들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체제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재스민 혁명과 같은 최근의 변화들의 설명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변동과 혁명이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 해체에 대한 예측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재스민 혁명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재스민 혁명은 SNS라는 현대 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재스민 혁명 모두 사소한 촉발요인에 의해

서 급격한 체제전복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은 체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감 상실이라는 내적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재국가에서 주민들은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감시망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순응적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특정한 임계점을 지나거나 촉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불만이 일시에 표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이중구조론적 설명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는 논의이다.

동유럽 체제전환

개별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동유럽의 탈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는 체제해체과정에서 계급적 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자본주의와 달리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계급적 특징들이 주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계급·계층 간의 갈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계급·계층의 문제는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 졌을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의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해체과정이 대규모의 유혈사태를 수반하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말기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과정도 별다른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루마니아를 제외할 경우 동유럽의 사회주의 해체는 다른 혁명의 과정과 비교했을 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체제 붕괴의 근본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소련과 동유럽체제의 해체를 누적적인 대

중봉기와 체제저항이라는 과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외부 세계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외부 세계의 개입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IMF와 국제사회에서 이 국가들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스스로’ 해체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이로 인한 총체적인 사회위기였다.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주도 세력이 엘리트 또는 노동자·농민 등 대중이냐에 따라 위로부터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전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같은 구분에 의할 경우 폴란드는 노동자 중심형, 체코슬로바키아는 반체제 지식인 중심형, 헝가리는 공산당 개혁파 중심형, 그리고 유혈사태를 수반한 루마니아는 민중봉기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의 북한 시사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과정은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된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생필품 부족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 위기가 보다 심각한 형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규모의 아사사태를 경험했으며, 이후에도 구조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7·1조치와 6·28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경제회생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유럽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민사회적 요소가 발전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공산당의 정권교체 및 체제전환이 시도될 경우에도 이후 민주화 및 시장화의 성패에 있어 북한시민사회의 발전정도 및 역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시민사회적 요소 및 사회운동 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징후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북한에서 반체제 저항운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서 집권세력의 권력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탁회의나 사회세력의 정치화 등 동유럽의 사례가 재연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종교적 상황은 종교와 시민사회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동유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체제전환과정이 진행된다고 해도 종교가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종교의 영향력 확대는 향후 북한위기구조의 변화 양상과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약화 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7·1조치 이후 비공식적 시장화 과정을 통해 북한에서도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참여 여부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세력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부격차는 평등체제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에게 생소한 것임과 동시에 부의 축적의 정당성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의 사회적 기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경험은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외부 정보의 유입, 특히 자발적인 정보의 유입과 확산이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신뢰감의 철회 및 체제 저항적 성향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했다. 북한체제 역시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외부 정보 유입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도 이미 정보확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가족과 어렵지 않게 통화를 하고 있다. 북한

의 휴대전화는 특정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일시에 정보가 확산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작은 계기도 급격한 정치변동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계기들은 우발적인 사건들이었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유혈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주민들의 내적 신념체계 속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재스민 혁명에 성공했거나 진행 중인 대부분 국가들의 주민들은 독재체제에서 고물가, 고실업, 그리고 만성적인 부패구조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주민들은 특권층의 부패와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살인적인 실업률에 시달렸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장기독재체제를 강요당했다. 재스민 혁명이 발발한 국가들의 주민들에게 기존 체제에 대한 내적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철회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회의 위기구조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부분적 시행 및 퇴행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식량배급제의 비정상적 운영과 아울러 차등적 배급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배급제의 약화 경향 속에서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급구조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우 상시적인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차등적 배급제에서 가장 취약한 4순위에 속하는 계층의 식량위기는 언제든지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갈등은 경제위기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배급제의 비정상적 작동 및 와해, 그리고 이로 인한 음성적,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의 기본적 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배급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들에게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가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7·1조치 이후 북한시장의 활성화 경향은 이 같은 요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급제의 와해와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는 국가와 시장 간 갈등, 간부와 주민 간 갈등, 엘리트 간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사후 포괄적인 새로운 권력재편을 시도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룡해를 중심으로 군에 대한 전면적인 장악을 시도했으며, 공안권력 대부분이 김정은은 물론 숙청된 장성택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성택의 급격한 몰락이 입증하듯이, 그 동안 신속히 마무리된 권력승계과정과 권력지형 재편의 결과를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 정착에 따른 확고한 지도력의 발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김정일 사후 북한 권력실세 간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지형 재편의 완료가 아닌 권력투쟁의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부 및 원로 등 기득권층의 반발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통합력은 위기국가인 북한체제 지탱의 중요한 원천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력지형 재편과정에서 북한 권력층의 균열 및 이완은 불가피하며, 이는 김정은 정권 내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대중적 소요가 발생할 경우 과거와 같은 일시불란한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 전망

현재 북한에서 체계적인 저항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의 증가 및 불만이 축적됨에 따라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경우 선대에 비해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강온파 엘리트집단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이 북한 지배엘리트의 갈등을 관리하거나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붕괴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대중적 불만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견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제어: 북한사회, 위기구조, 사회변동

Abstract

Structure of crisis in North Korean society and prospect for social changes: comparative sociological point of view

Cho, Han-Bum, Hwang, Sun-Young.

There is now no possibility that systematic act of resistance would occur in North Korea, but there is possibility that accidental situation would occur due to increasing various conflicts and accumulating complaints. More to the point, in case of Kim JungEun, he is not capable of controlling this situation as compared with his forefathers. Kim JungIl had the power to effectively regulate hard liners and moderates elite group, and this could secure the stability of his government. However, the chances are Kim JungEun, who doesn't have enough power and experience, looks like he will reach his limit to manage or regulate the conflicts among the North Korean ruling elit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a situation where control systems are operating normally, were collapsed by the rapidly spreading process of the public's discontent and resistance. In particular, we need to focus on the point that in the process of the deepening of the economic crisis, the public's latent discontent spread uncontrollably caused by a specific reason. This show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which seems like working normally on the surface.

Keywords: North Korean society, Social structure, Social changes

I

서론



김정은은 집권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공식행사에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미국영화 록키의 주제가를 연주하게 했으며, 놀이기구에서 미소를 연출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부인인 리설주를 공개행사에 동반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같은 행보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정은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했으며, 이듬해인 2012년 북한의 4차 당대표자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통해 당 제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약 4개월 만에 북한의 3대 권력기구인 당·정·군의 최고위직을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7월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 북한군 최고 실세였던 총참모장 리영호를 전격적으로 숙청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나이 어린 지도자라는 인상을 불식시켰다.

김정은은 6·28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며, 8월에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와의 면담에서 “북한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군부에 대한 전반적인 물갈이와 아울러 군에서 당으로 권력중심이 이동하는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의 변화조짐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북한의 중앙과 지방에 다수의 경제특구를 설치함으로써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집권 2년을 경과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특히 2013년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장성택의 숙청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I
II
III
IV
V
VI
VII

의 강화로 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일이며, 북한경제위기 해소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북한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요인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경제회생의 근본적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이 극도로 약화되었을 개연성이다.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사태 이후 북한경제는 근본적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배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시장의 확산은 2009년 화폐개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북한주민이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에 해당한다. 이후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의 화폐보다는 중국 위안이나 경화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시장은 북한 당국이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음성화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대내외의 시장으로부터 모두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시도하는 경제회생정책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비공식적 시장화의 확산은 배급경제의 한계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시장과 비시장 구조 간의 간극을 확대시킴으로써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시장중심의 정경유착형 신흥 부유층의 형성과 대다수 기층민들과의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과 지방경제 간의 심각한 격차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의 변화에 대한 유력한 분석 중 하나는 김

정은 체제가 경제회복과 민생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강경 보수세력인 군부를 제압하고 실용주의 세력인 당·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추론이다. 그러나 이는 정권에 위협이 될 비대해진 군부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당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체제의 신주류가 군이 가진 이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북한 권력의 제2인자로 평가되어온 장성택의 전격적 처형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함께 향후 권력투쟁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집권 2년을 경유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다양한 위협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경제침체와 아울러 권력기반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의 이완 등 다양한 요인들은 위기에 처한 북한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간 위기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북한사회의 변동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식량배급제 와해, 사회갈등구조,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지형 재편과 영향을 통해 북한사회의 위기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유럽 체제전환의 분석에 기반하여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회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I

II

III

IV

V

VI

VII

II

사회변동과 혁명



1. 사회변동과 혁명이론

사회변동은 사회구조와 사회관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서, 사회질서와 제도, 체제, 정신 및 물질문화, 그리고 가치체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변화를 포함한다. 사회변동은 인류사회의 초기부터 발생하여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 정상적·지속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¹ 사회변동의 원인과 형태, 그리고 양상은 다양하며 단순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사회변동의 원인은 사회적 갈등이나 통합의 실패, 새로운 이념의 등장, 기술의 발전과 적응,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다. 사회변동은 해당 사회가 처한 상황과 영향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변동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반복하느냐 또는 일정한 단선적인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진화론적 사회변동과 순환론적 사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변동의 분석 수준은 개인적 행위에서부터 사회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회변동은 발생하는 속도의 점진성과 급진성에 따라 양상을 달리 한다. 점진적 사회변동의 경우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비행기의 등장은 물리적 이동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줌으로써 인간 생활 전반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변동에 대한 기술 결정론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기간의 급격하고도 전반적인 사회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혁명이 바로 주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은 혁명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에 해당한다. 사회혁명은 정치혁명보다 한층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인 사회변동을 수반한다. 사회혁명은 국가 및 계급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¹ Robert H. Lauer, *Perspective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7), p. 4.

I
II
III
IV
V
VI
VII

표 II-1 사회변동의 분석 수준²

분석 수준	대표적인 연구 영역	대표적인 연구 단위
세계	국제조직, 국제적 불평등	GNP, 무역 관련 자료, 정치적 동맹
문명	문명의 순환적 생존과정과 다른 유형의 변동들 (진화적 혹은 변증법적 등)	예술적·과학적 혁신과 다른 혁신들, 사회제도
문화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테크놀로지, 이데올로기, 가치
사회	계층체계, 구조, 인구학, 범죄	소득, 권력, 위광, 역할, 이주율, 살인율
공동체	계층체계, 구조, 인구학, 범죄	소득, 권력, 위광, 역할, 인구성장, 살인율
제도	경제, 정치, 종교, 결혼과 가족, 교육	가족소득, 투표유형, 교회참석, 이혼율,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조직	구조 상호작용의 유형들, 권위구조, 생산성	역할, 각종 친목단체들, 관리/생산 비율, 노동자 일인당 산출량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형태들, 커뮤니케이션	갈등이나 경쟁 또는 인접의 양, 상호작용에 대한 참여 정도의 차이의 정체성
개인	태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들, 열망

초래하며, 계급구조를 기초로 한 아래로 부터의 폭동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혁명은 사회구조의 변동과 계급변동, 정치변동과 사회변혁을 포괄함으로써 반란이나 다른 형태의 갈등 또는 변혁과 구분된다. 사회혁명은 사회·경제체제 및 정치구조의 근본적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동시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비해 정치혁명은 사회구조가 아닌 국가구조 또는 정치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하며, 반드시 계급갈등을 수반하지도 않는다.³

² 위의 책, p. 5.

³ 테다 스카치폴, 한창수·김현택 역, 『국가와 사회혁명』 (서울: 까치, 1981), pp. 17~18.

사회운동은 비제도적 방식으로 기존 질서의 변혁을 시도하는 체계적인 집합행동이다. 사회운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질서의 급격하고도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산업사회 이전 사회의 경우 반란이나 민중봉기가 주요한 사회운동 형태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발전한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탈 산업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신사회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태로 등장했다. 독재체제 및 권위주의체제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사회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독재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국가적 테러 및 무력에 기반한 억압적 통치기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와 다른 정치변동 양상을 보인다. 독재국가에 있어서 정치변동은 급격하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지배체제 및 지배집단의 교체는 대체로 혁명적 과정을 수반한다. 독재국가의 경우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혁명을 통한 변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동에서 진행된 재스민 혁명은 독재국가 정치변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⁴

미국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혁명이론의 전개과정을 볼 경우,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⁵ 골드스톤(Jack A. Goldstone)은 혁명이론의 전개과정을 3세대로 구분한다.⁶ 르봉(Gustave LeBon), 엘우드(Charles A. Ellwood), 소로킨(Pitrim A. Sorokin), 에드워즈(Lyford P. Edwards), 레더러(Emil Lederer), 페티(George S. Pettee), 그리고 브린튼(Crane

4. 박형중·조한범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144~146.

5. 위의 책, pp. 145~151.

6. Jack A. Goldstone, "Theories of Revolution: The Third Generations," *World Politics*, Vol. 32 (April 1980) 참조.

I
II
III
IV
V
VI
VII

Brinton)과 같은 학자들이 활동한 1900년에서 1940년 사이가 제1세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혁명이론의 일반이론화보다는 혁명의 개별적 유형에 관심을 가졌다. 1940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2세대의 시기에는 혁명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임으로써 혁명이론이 활발하게 성장한 시기에 해당한다. 데이비스(James C. Davis), 거(Ted Robert Gurr), 존슨(Chalmers Johnson), 스멜서(Neil Smelser),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톨리(Charles Tilly) 등의 학자들이 2세대 혁명이론의 발전에 공헌했다. 2세대 혁명이론들은 1세대와 달리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이론을 토대로 혁명의 원인과 시기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진전을 보였다. 3세대 혁명이론가들은 2세대 혁명이론이 간과한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적 갈등, 발전과 근대화 그리고 인류학 및 농민연구 등의 명제들을 혁명연구에 도입했다. 1975년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보인 페이지(Jeffrey Paige), 트림버거(Ellen Kay Trimberger), 스카치폴(Theoda Skocpol), 그리고 에이젠스타트(S. N. Eisenstadt) 등이 3세대로 분류될 수 있다. 3세대 혁명이론가들은 1, 2세대와 달리 역사적인 분석을 중요시 했으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혁명들을 연구했다.

스카치폴은 혁명이론을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 집합심리학적 이론(Aggregate-psychological), 그리고 정치갈등 이론(Political Conflict), 체계·가치합의 이론(System/Value Consensus) 등으로 분류했다.⁷ 부하린(Nikolai Bukharin)과 같은 기술결정론자, 레닌(V.I.Lenin)이나 마오쩌둥 등의 혁명가, 루카치(Georg Lukacs)와 그람시(Antonio Gramsci) 등 서구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알튀세(Louis Althusser)와

⁷ 테다 스카치폴, 한창수·김현택 역, 『국가와 사회혁명』, pp. 16~25.

같은 구조주의자들은 마르크스 혁명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집합심리학적 관점의 혁명이론은 좌절-공격(Frustration-aggression)이라는 심리학의 주요 개념을 활용했으며,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을 활용한 테드 거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와 실제 상황간의 괴리가 박탈감의 원인이며, 혁명의 동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톨리는 정치갈등론의 대표적 학자로 ‘동원’의 개념을 사용해서 혁명을 설명했다. 톨리에 의하면 박탈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반대로 정부가 혁명을 억압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존슨은 거시사회학적 차원에서 혁명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체제가 치합의 이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가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사회체계의 존속이 가능하다. 반면 혁명은 사회구조 내의 변동을 목적으로 폭력을 활용하며, 성공한 혁명은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변화시킨다.

I
II
III
IV
V
VI
VII

표 II-2 집합행동(사회운동·혁명) 이론의 분류⁸

분류자	유형	내용(이론 또는 학자)
Jack A. Goldstone	1) 제1세대(1900 - 1940)이론 2) 제2세대(1940 - 1975)이론 3) 제3세대(1975년 이후) 이론	Gustave LeBon, C. A. Ellwood, P. A. Sorokin, L. P. Edwards, C. Brinton 등. J. C. Davis, C. Johnson, N. Smelser, S. P. Huntington, C. Tilly, T. R. Gurr, Feierabend 부부 등. T. Skocpol, J. M. Paige, E. K. Trimberger, S. N. Eisenstadt 등.
James A. Geschwender	1) 발전침체이론(가설) 2) 상승기대이론 3) 하향이동이론 4) 지위불일치이론	J. Davis, L. P. Edwards, C. Brinton 등. T. R. Gurr, Feierabend 부부 등. L. M. Killian, R. H. Turner, S. M. Lipset, T. Draper 등. G. Lenski, L. Broom 등.
Richard A. Berk	1) 고전이론 2) 사회적 원인론 3) 사회적 과정론	G. LeBon, S. Freud, H. Blumer 등. (수렴이론, 전염이론 등) W. Kornhauser의 대중사회이론, N. Smelser의 가치부가기론, 좌절공격이론 등.
Martin N. Marger	1) 심리학적 이론 2) 구조적 긴장론 3) 실조(박탈)이론	E. Hoffer, T. Adorno 등의 심리학자 C. Johnson, N. J. Smelser 등. 상대적 박탈이론, 상승기대이론, 하향이동이론, 지위불일치이론 등.
Theda Skocpol	1)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 2) 집합심리학적 이론 3) 체계가치합의 이론 4) 정치적 갈등이론 5) 사회구조적 비교사적 접근이론	마르크스주의이론(K Marx, G. Lukács, A. Gramsci, 레닌 등) J. Davis, Feierabend 부부, T. R. Gurr, 좌절공격이론, 상대적 박탈이론 등. T. Parsons, E. Tiryakian, N. Smelser, C. Johnson 등. C. Tilly 등. T. Skocpol, B. Moore 등.

위의 표에 정리된 이론들은 분석 시각의 미시적 또는 거시적 성격의 구분에 따라 다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범주화가 가능하다.⁹ 미시적 접

⁸ 김영정 편저,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서울: 현암사, 1988), p. 10.

근의 경우 르봉, 프로이트, 블루머 등 전염이론으로 불리는 고전이론들과 집합심리학·사회심리학적 이론이 해당한다. 거시적 접근의 경우 구조기능주의 계열의 이론들과 구조적, 비교사적 분석이 해당한다.

● 표 II-3 집합행동(사회운동·혁명) 분석의 두 가지 시각

분석시각	유형	내용(이론 또는 학자)
미시사회학적 분석	고전이론 현대사회심리학적 이론	전염이론, 수렴이론 발전침체이론, 상승기대이론, 하향이동이론, 지위불일치이론, 의사결정이론, 발현적 규범이론, 게임이론
거시사회학적 분석	기능주의적 분석 자원동원화이론 (정치갈등이론) 사회구조적·비교 사적 분석	T. Parsons, N. Smelser, C. Johnson, E. Tiryakian 등 C. Tilly, S. P. Huntington, A. Obershall, U. A. Gamson, M. N. Zald, J. D. McCarthy B. Moore, T. Skocpol, J. M. Paige, E. K. Trimberger, S. N. Eisenstadt 등

2.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반하는 혁명과 집합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대부분 봉건체제의 해체와 근대사회의 등장, 산업화와 사회주의체제의 등장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들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체제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재스민 혁명과 같은 최근의 변화들의 설명에도

⁹ 위의 책, p. 14.

I
II
III
IV
V
VI
VII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변동과 혁명이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 해체에 대한 예측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재스민 혁명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재스민 혁명은 SNS라는 현대 정보 사회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과정은 기존 사회변동과 혁명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등장 및 사회주의 혁명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기존 이론의 시각에서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근대화된 체제의 해체과정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와 상이한 계급구조 및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과정에는 장기간 지속된 내적 모순과 아울러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징적인 것은 외형상 견고한 체제를 유지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소한 촉발요인에 의해 단기간에 붕괴했으며, 진영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과정은 심각한 유혈사태를 동반하지 않았다. 또한 서독에 흡수 통일 된 동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급구조의 급격한 변동도 수반되지 않았다. 중동 재스민 혁명과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재스민 혁명의 경우 독재체제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저항이 중요한 정치변동의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영향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아울러 재스민 혁명은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난 개별 독재국가의 정권 전복 과정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동 재스민 혁명은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이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혁명과 정치변동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회주의권의 해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재스민 혁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상당부분 사회주의체제와 중동 국가의 외형상 권력체제와 공권력의 안정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반면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체제저항행위와 혁명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내적 상태를 분석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재스민 혁명 모두 사소한 촉발요인에 의해서 급격한 체제전복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은 체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감 상실이라는 내적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재국가의 주민들은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감시망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순응적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특정한 임계점을 지나거나 촉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불만이 일시에 표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이중구조론적 설명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는 논의이다.¹⁰

이중구조론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상호모순적인 2개 구조 간의 괴리와 긴장상태가 급격한 사회변동과 혁명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관찰이 가능한 공개적 행위와 내면적 행위, 공적관계 및 사적관계, 그리고 1차 사회와 2차 사회 간의 괴리가 급격하게 커질 경우, 체제의 심각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이중구조론은 시기적으로 산업사회 등장 이후의 사회변동과 혁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식구조에

¹⁰ 박형중·조한범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177~184.

I
II
III
IV
V
VI
VII

서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이중구조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할 수 있으나, 특히 독재체제 및 억압적 국가기구가 작동할 경우 보다 은밀한 형태로 잠재하게 된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비공개적 영역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불만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 또는 폭력적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제2사회론은 이중구조론의 대표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사회론은 공적선호와 사적선호 간의 괴리에 주목한다. 사회주의체제나 독재체제의 경우 억압적 통제기구가 고도로 발달한다는 점에서 공적선호와 사적선호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공적영역에서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율성과 개인주의,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선호를 제약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는 공적선호와 사적선호 간의 괴리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제2사회론은 시민사회론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근대화에 대한 일원론적 접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에 대한 일원론적 접근에서는 근대화과정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및 발전을 수반하며, 발전의 결과는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회주의체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적 요소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외형과 달리 내적으로는 발전의 필연적 결과들인 제2사회, 제2경제, 그리고 제2문화와 인성 등이 형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헨키스(Elemer Hankiss)는 사회주의체제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적 요소들에 주목,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2사회의 개념을 활용하여 헝가리 사회주의체제를 분석했다.¹¹

제2사회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은 경제영역이다. 사

회주의 계획경제는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시적인 불균형을 초래했다. 사회주의체제의 지하경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비공식적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제2경제는 체제 형성 초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진전과 병행하여 지하경제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하경제는 소련과 동유럽 등 모든 스탈린주의 사회주의체제에 일반적 현상이었다. 제2경제(Second Economy), 저항-경제(Counter-economy), 비공식 경제(Unofficial Economy), 평행시장(Parallel Market),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회색경제(Gray Economy), 그리고 제4부문(Fourth Sector) 등은 모두 사회주의 지하경제를 지칭하는 개념들이다.¹² 제2경제는 공식적으로 불법 영역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2경제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주민의 경제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사회적 행위에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

제2문화는 사회주의체제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자아방위기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주의체제의 공식 문화체계인 제1문화와 달리 제2문화는 반문화 또는 대안문화의 특징을 지녔다. 공개적인 정치적 행사

¹¹-Elemer Hankiss, "The Second Society: Is there a Second Special Paradigm Working in Contemporary Hungary?," *Diagnosis*, No. 2 (1986) 참조.

¹²-G.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1977); S.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Т. Корягина, "Теневая экон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3 (1990); Б. Н. Казанцев, "'Частник' в сфере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ОЦИС*, No. 11 (1993); А. В. Крылова, "Лабиринтах теневой экономи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No. 12 (1992) 참조.

I
II
III
IV
V
VI
VII

와 공식적인 행위의 영역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행위자들은 체제 순응적 태도를 견지했으며, 이는 제1대중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반면 감시와 처벌이 작동하지 않는 친구와 연인, 가족과 같은 사적영역에서는 체제에 대한 비판과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등 다른 태도가 나타나며, 이는 제2대중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제2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사회적 행위, 그리고 문화 등은 제2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제2사회라는 개념은 소련·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내면적 요소 분석에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체제의 붕괴와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분석에도 유용하다. 제2사회론은 억압적 통제기구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사회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¹³

선호위장이론(Preference Falsification Theory) 역시 독재체제의 유지와 붕괴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력을 제공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나 봉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대중봉기에 참여할 경우 위험이 더 크다는 개인들의 판단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강력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독재국가의 경우, 개인들의 선호에 대한 위장의 경향이 나타난다. 쿠란(Timur Kuran)은 선호위장은 공적선호와 사적선호 간의 괴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¹⁴ 사적선호와 공적선호 간의 괴리가 클 때, 각 개인들은 선호위장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반정부 또는 반체제 인식과 정서가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행위가 표출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크

¹³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참조.

¹⁴ Timur Kuran, *Private Truths, Public Lies: The Social Consequence of Preference Falsifica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기 때문이며, 따라서 개인들은 선호위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저항행위에 대한 참여가 보다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이 생길 경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은 기존 체제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확산되는 경우 발생하며, 명시적 동조를 통해 지불하는 외적 비용이 선호위장 선택의 내적 비용보다 낮아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혁명발생의 임계점을 의미한다.

쿠란의 이론에 따르면 대중봉기와 혁명의 발생시점은 독재체제에 순응하는 비용보다 저항의 비용이 더 저렴하게 되는 시점이다. 선호위장이론은 외형상 안정적인 독재체제가 일거에 붕괴되는 현상의 설명에 있어 유용하다.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역에서의 체제순응적 행위들이 특정한 계기에 의해 일시에 체제 저항적 행위와 봉기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선호위장이론은 공식적 영역에서의 대중적 무기력과 대중의 잠재력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공적영역에서 지도자와 체제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체제순응적 태도가 선호위장이론에 수 있으며, 내면에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혁명이나 봉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엘리트가 아닌 대중이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논의¹⁵는 ‘비 엘리트 대중봉기론’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선호위장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체제저항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비 엘리트 대중봉기론은 1950년에서 2000년까지의 각 국가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정치변동 사례에 대한 비교사

¹⁵-Ruth Kricheli, Yair Livne and Beatriz Maganoli, “Taking to the Street: Theory and Evidence on Protests under Authoritarianism,”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August 15, 2011) 참조.

I
II
III
IV
V
VI
VII

회론적 자료와 경험을 통해 대중들이 왜 위험을 감수하고 봉기에 참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비 엘리트 대중봉기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봉기와 체제저항 행위에 대한 설명의 중심을 엘리트에서 대중들로 이동시켰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엘리트와 달리 체제저항행위의 조직 및 수단, 자원의 접근,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제시 등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엘리트와 달리 절대 다수라는 물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압도적인 다수가 소수의 전위대로 구성된 독재체제에 저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확산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항행위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엘리트 대중봉기론은 독재국가가 억압체제와 통제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대중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재국가에서 대중봉기가 발생할 경우 정치체제의 변화는 파괴적이고 급진적 양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는 대중봉기가 고도로 억압적인 통제체제가 작동하고 대중적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들은 체제의 억압에 순응하는 양태를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 봉기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과 시점을 면밀히 계산한다. 일단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동일한 행동, 즉 체제저항행위에 동조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어 있을 때, 대중봉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촉발요인이며, 반체제 인사의 행동이나, 체제에 대한 사적인 원한에 기인한 개별적 행동, 또는 우발적인 요인 등 다양하다. 의도적인 촉발요인에 해당하는 행위(First Mover)인 저항은 반정부적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초의 저항은 불만 세력이 대중들에게 정치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상황

이다. 다음 단계의 저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초의 저항행위를 통해 추가적 대중동원에 실패하게 되면 저항은 의미를 잃게 되며, 제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초의 저항행위가 충분한 수의 추가적인 대중동원을 유도해 낼 경우, 보다 많은 수의 대중들이 봉기 참여를 선택하게 된다. 비 엘리트 대중봉기론은 권력의 통제가 강할수록 개인들은 공식적으로 체제순응적 태도를 견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봉기 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비 엘리트 대중봉기론은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중동의 재스민 혁명에서 관찰된 촉발요인과 그 이후의 대중봉기 진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¹⁶

¹⁶ 박형중·조한범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p. 184.

III

동유럽 체제전환



1980년대 말 발생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동유럽 사회주의정권의 연쇄적 몰락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사회주의체제의 장기 지속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구조적 한계와 모순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하던 관점 역시 1980년대 말 현상 예측에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대부분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에 주목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그러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과 동유럽에서 진행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설명에 있어서 기존 논의들은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개별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동유럽의 탈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는 체제해체과정에서 계급적 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자본주의와 달리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계급적 특징들이 주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계급·계층 간의 갈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계급·계층의 문제는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 졌을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 해체의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해체과정이 대규모의 유혈사태를 수반하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말기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과정도 별다른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루마니아를 제외할 경우 동유럽의 사회주의 해체는 다른 혁명 과정과 비교했을 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체제 붕괴의 근

I
II
III
IV
V
VI
VII

본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소련과 동유럽체제의 해체를 누적적인 대중봉기와 체제저항이라는 과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외부 세계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외부 세계의 개입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IMF와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들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 스스로’ 해체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이로 인한 총체적인 사회위기였다.

동유럽의 체제전환의 주도 세력이 엘리트 또는 노동자·농민 등 대중이냐에 따라 위로부터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전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같은 구분에 의할 경우 폴란드는 노동자 중심형, 체코슬로바키아는 반체제 지식인 중심형, 헝가리는 공산당 개혁파 중심형, 그리고 유혈사태를 수반한 루마니아는 민중봉기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폴란드: 노동자 중심형

폴란드의 탈 사회주의화 과정은 노동자 단체의 중추적 역할과 반체제 지식인들의 합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폴란드 노동자운동, 노동자 단체의 역사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폴란드 노동운동은 폴란드가 독립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법과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폴란드는 1922년에는 유럽 최초로 유급휴가제를 도입하고 노동문제 전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운영했다. 당시 선진적 노동 관련법과 제도에 힘입어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활동했으며, 대표적 단체로 사회주의 성향의 폴란드 직장연합(the

Organization of Occupational Association), 민족주의 성향의 폴란드 직장연맹(the Polish Occupational Federation), 그리고 기독교 성향이 강한 기독교 직장연맹(the Christian Occupational Federation)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공황의 발생으로 폴란드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1920년대에 도입된 노동 관련법도 폐지 또는 개정되었다.

폴란드 공산화에 따라 노동관련 제도가 부활했으며, 1956년 노동자 자주관리제(Workers' Self-government)로 발전했다. 그러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분화는 용인되지 않았다. 1949년 폴란드정부는 분화되어 있던 노동단체를 통합하여 단일 노동단체인 노동조합연맹(the Federation of Trade Unions)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중앙협의회(the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에 중추적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통합된 친 정부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이들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인·허가권과 각종 노동분쟁에 관한 조정 권한의 부여를 의미했다. 노동조합 중앙위원회는 당·국가와의 협력 체제 유지에 주력했으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부차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했다. 이 같은 점은 1980년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 출범의 주요 원인이었다.

1989년 본격화된 폴란드 정치변동은 1970년대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폴란드는 197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1980년에는 200억불이 넘는 외채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로 인한 불가인상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심화시켜 시위로 이어졌으며, 전국적 노조연합인 솔리대리티(Solidarity)의 탄생배경으로 작용했다. 이후 솔리대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폴란드 노동자 중심의 저항세력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1988년 전국적인 시위사태의 수습을 위해 정부는 솔리대리티를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했으며, 정부와 노조 간

I
II
III
IV
V
VI
VII

원탁회의를 통해 폴란드 정치변동의 큰 틀이 확립되었다.¹⁷

1980년 폴란드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물가인상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단 하루 만에 주요 식료품 가격을 100%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반대시위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그단스크(Gdansk) 조선소 경영진은 시위를 이유로 크레인 기사 한명을 해고했고, 이 사건은 폴란드 노동자들의 단결과 솔리대리티가 설립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의식이 강한 그단스크 조선소 노동자들은 크레인 기사의 해고에 항의하여 파업했으며, 이후 실레시아와 바르샤바의 광부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그단스크 조선소 파업을 주도한 레흐 바웬샤(Lech Walesa)의 주도로 파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반체제 지식인들도 그단스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반정부운동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협상팀을 구성하고 그단스크 파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1980년 8월 31일 폴란드 정부는 파업위원회 측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폴란드 사회주의 정권의 무기력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노동조합들이 설립되었고, 개별 노동조합들은 그단스크 조선소 파업 당시에 사용하였던 솔리대리티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9,500,000만 명이 가입된 거대 노동운동 단체가 설립되었고, 1980년 11월 10일 정부는 이를 공식 승인했다.

1980년 9월 6일 폴란드 공산당 1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기에레크(Gierek)의 심장마비 이후 측근들이 당 지도부에서 숙청되었다. 신임

¹⁷ 이상환·김웅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pp. 42~43.

당 서기로 선출된 카니아(Stanislaw Kania)는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대부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솔리대리티는 1980년 10월 3일 전국적으로 1시간에 걸친 총파업을 지시했으며, 결국 카니아 정부의 양보를 얻어냈다. 이후에도 카니아 정부는 노동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당내 불만을 야기했으며, 1981년 2월 11일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강경파 야루젤스키(Jaruzelski)가 국방장관과 수상을 겸직하게 되었다.

1981년 9월 솔리대리티 전국 대회가 그단스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기간 소련함대는 그단스크 항구 외곽에 정박함으로써 경고를 보냈다. 솔리대리티는 과거 노동자 자주관리제를 단위 직장별로 부활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이를 관철했다. 위기감을 느낀 야루젤스키는 1981년 12월 12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솔리대리티 본부에 있던 지도부를 체포했다. 솔리대리티는 공장과 광산을 점거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야루젤스키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다. 계엄령 하에서 솔리대리티는 불법단체로 규정되었고 바웬샤도 체포되었으나 조직이 와해되지는 않았다. 바웬샤 체포 이후 부약(Zbigniew Bujak)이 솔리대리티 지하운동을 지휘했으며, 기관지인 삼이즈닷(Samizdat)을 출간했다.

야루젤스키는 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 강력한 억압적 통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솔리대리티 간부들의 추가적인 체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야루젤스키는 억압적 통치를 강화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빌미로 한 소련의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체제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 1983년 교황의 폴란드 방문 직전 야루젤스키는 바웬샤와 솔리대리티 간부들을 석방하였고, 계엄령을 해제했다.

I
II
III
IV
V
VI
VII

1984년 10월 솔리대리티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던 반체제 인사인 포 피엘루스코(Jerzy Popieluszko) 신부가 경찰에 의해 납치,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신부를 추모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다. 추모 집회는 반정부, 반소련 경향을 보이며 확산되었고, 1985년에 접어들면서 솔리대리티는 총파업을 지시했다. 반면 정부의 통제능력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산당 내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권력투쟁과정에서 경찰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1987년 야루젤스키는 경제회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민간경제의 확대와 국영기업의 자율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치제도의 민주화 문제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하여 1987년 11월 29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정부 제시안이 부결되었다. 이는 당시까지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투표에서 정권이 패한 최초의 사례였다.

1988년 5월 실레시아(Silesia)광산 파업에 이어 그단스크 조선소로 파업이 확대되었으며, 솔리대리티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국내 경제위기 심화와 고르바초프의 빼레스뜨로이카로 인해 강력한 후원세력을 잃은 야루젤스키는 바웬사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폴란드 공산당은 붕괴상황에 직면했으며, 솔리대리티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989년 정부와 솔리대리티 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솔리대리티는 각종 단체의 합법화와 함께 조기 자유총선의 실시를 요구했으며 정부 측은 이에 합의했다. 아울러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의 폐기와 대통령의 의회 선출에도 합의했다.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야루젤스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신임 수상으로 키스작이 임명되었으나, 폴란드 의회는 키스작 내각에 대해 불신임했다. 바웬사는 정부를 인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수상으로 솔리대리티 출신이자 자신의 친구인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를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9년 9월 12일 마조비에츠키 수상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동유럽 공산국가 가운데 최초의 비공산주의 정부의 수립이었다. 1990년 1월 28일 폴란드 공산당은 자체 투표를 거쳐 당을 해체했으며, 1994년에 예정되었던 자유총선을 앞당겨 1991년에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폴란드 공산정권은 붕괴했다.

2. 체코슬로바키아¹⁸: 반체제 지식인 중심형

체코슬로바키아의 탈 사회주의화 과정은 비교적 견고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붕괴가 단기간에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89년 11월에 진행된 시민포럼(Civic Forum)중심의 반정부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울러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정서 속에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한 기억과 정신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점도 헝가리 공산정권 붕괴 과정의 중요한 설명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폴란드나 헝가리와 달리 변동의 과정에서 집권세력과 저항세력 간의 협약적 요소가 크지 않았으며, 변동의 과정은 대결적 국면으로 시작되었다.¹⁹ 이 같은 점에서 체코의 탈 사회주의화는 아래로부터 진행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체코의 공산정권 붕괴 과정은 77현장²⁰ 지식인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에 학생들이 합세함으로써 노동자 집단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었다.

¹⁸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¹⁹ 이상환·김용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pp. 45~48.

²⁰ 1977년 1월 1일 인권의 존중과 헬싱키 선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2000어 선언'을 의미한다. 작가, 교수 등 지식인 240여명이 서명했으며, 참여자들을 가리켜 77현장 지식인 그룹이라 한다.

I
II
III
IV
V
VI
VII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폴란드 및 헝가리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의 와해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까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은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도부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88년 8월 21일 프라하의 봄 20주년 기념 국민집회는 체코슬로바키아 정치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참가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였으며 평화적 거리 행진을 시도했으나 체코 정부는 이를 강제 해산했다. 1988년 10월 28일 77현장 그룹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독립 70주년 기념집회가 개최되어 약 5,000명이 참가했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당시 당국이 우려한 것은 지식인 그룹의 반정부 운동이나 일반 국민들의 집회가 아니라 68년 당시 당 총서기로서 인간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다 숙청당한 두브체크(Alexander Dubček)의 부활이었다. 1989년에도 프라하의 봄 기념집회가 개최되었으나 경찰이 강경 진압했으며, 폴란드, 헝가리, 동독 등 인접 국가의 탈 사회주의 도미노 현상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은 당시까지 대체로 안정을 유지했다.

1989년 11월 17일 동독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영향으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 학생 25,000여 명이 프라하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마틴 스미드(Martin Smid)가 사망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국민들의 합세로 200,000여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가 국민적 저항행위로 확대되자 경찰은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으며, 방송도 시위 장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반정부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오스

트라바(Ostrava), 부르노(Brno), 그리고 브라티스라바(Bratislava) 등에서 시위가 발생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국은 스미드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는 점을 공식 발표하였지만 시위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벨과 반체제 인사들은 시민포럼이라는 반체제 연합조직을 결성했으며, 두브체크도 프라하에 와서 하벨과 합세했다. 두브체크의 합세로 시위대는 500,000여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정권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1989년 11월 24일 야케시 공산당 서기장 및 정치국 전원과 정부 내각이 총사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퇴는 전략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체제 운동에 합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1989년 11월 25일 하벨과 두브체크를 중심으로 한 반체제 시위대의 규모는 800,000여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27일 전국적으로 2 시간 동안의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수상이었던 아다메츠(Adamec)는 시민포럼과의 협상을 제안했고, 신임 정치국원 중 강경파 3명이 퇴진했다. 체코 공산당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당내 강경파를 대신해 개혁파가 당권을 장악했다.

1989년 11월 27일 공산당 정치국은 개혁파인 우르바네크(Karel Urbanek)를 신임 당 총서기로 선출하였고, 아다메츠 수상은 시민포럼과의 협상에서 자유총선의 실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 그리고 새 내각의 구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1989년 12월 3일 아다메츠 수상에 의해 발표된 새 내각에 대해 시민포럼은 즉각적으로 거부했으며 총 파업을 선언했다. 12월 7일 아다메츠 수상을 포함한 새 내각이 사퇴하였고, 신임 수상으로 칼파(Marian Calfa)가 임명되어 연립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연립정부 내각에는 10명의 공산당원과 11명의 시민포

I
II
III
IV
V
VI
VII

럼 측 인물이 참여했으며, 내무부의 폐지와 아울러 내무부 산하 경찰을 시민포럼이 참여하는 사법위원회 산하로 이관했다.

1989년 11월 17일에 시작되었던 반정부운동은 23일 만에 승리로 끝났으며,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하벨은 이를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이라 지칭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기했으며, 체코 출신인 하벨을 대통령으로 슬로바키아 출신인 두브체크를 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1990년 1월 칼파와 2명의 공산당원 장관이 공산당을 탈당하였고,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공산당은 의석 중 90석을 상실했다. 공산당은 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내에 잔존하고 있던 강경파를 출당 조치했다.

1990년 3월 체코 의회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고, 4월 20일 국가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으로 변경했다. 1990년 6월 자유총선이 실시되어 체코 지역에서는 하벨을 중심으로 한 시민포럼이, 슬로바키아 지역에서는 비폭력시민연대(People Against Violence)가 승리하여 공산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3. 헝가리: 당내 개혁과 중심형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민주화를 시도한 국가이자 비교적 순조로운 경로를 통해 체제가 변화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헝가리는 폴란드에 비해 반체제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으며, 1956년 봉기 이후 특기할 만한 저항운동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체제에서도 비교적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 소

련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자신들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²¹

헝가리 탈 사회주의화는 위로부터 진행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외부 지식인 그룹의 지원을 받은 헝가리 공산당 내 개혁파가 보수파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탈 사회주의화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헝가리 집권층이 스스로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헝가리는 동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서서히 형성되고 있던 시민사회를 제약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침체의 심화에 따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당내 세력 사이에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했다.²²

다른 동유럽 국가와 비교해 헝가리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요소를 대거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헝가리 국민들은 공산당에 정치적 권력을 양보하고 반대급부로 경제적 풍요를 영위한다는 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 탈 사회주의화는 1980년대 중반 헝가리 경제침체 심화로 경제적 혜택과 풍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층 내부의 개혁파가 경제회생을 위한 정치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헝가리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카다리즘(Kádárism)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행해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은 헝가리의 반공산당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탈 스탈린화에 고무된 헝가리 반체제지식인과 학생들은 1956년 10월 23

21. 이상환·김용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pp. 40~42.

22.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284~285.

I
II
III
IV
V
VI
VII

일 대규모 반체제 시위를 통해 개혁성향 때문에 총리직에서 사임한 임레 나지(Imre Nagy)의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침공과 무력 진압으로 인해 반체제 시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의 창당과 아울러 야노쉬 카다르(Janos Kádár)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다. 카다르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에 의한 정치적 권력 독점을 목인한 대가로 경제적, 사회적 양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1968년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시장경제요소를 포함하는 신경제메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 NEM)이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실질임금의 인상과 아울러 서구로부터 수입된 생필품이 정부의 보조에 의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었다. 제2경제영역에서의 활동이 용인되면서 헝가리 국민들은 이윤추구행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같은 카다리즘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확산과 아울러 정치적인 무관심의 경향이 커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헝가리에서도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표된 77헌장에 동조하는 34인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을 민주적 반대파로 규정하고 시민권의 확대와 인권보호를 주장했다. 한편 민족-민중주의적 지식인 그룹은 문학잡지를 통해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의 배격과 전통적인 가치의 보존을 주장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달리 이 같은 반체제 운동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헝가리 반체제 세력에 대해 카다르 정권은 유연하게 대응했으며, 체포나 구금조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헝가리 반체제 운동이 급진적이거나 체제 저항적 성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한 이유였다.

헝가리 정치의 안정을 가져다 준 카다리즘의 위기는 1980년대 중반 헝가리 경제침체의 심화로부터 비롯되었다. 헝가리 경제성장률은 1985년

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무역 및 재정적자의 증가와 아울러 순외채도 1983년 89억 달러에서 1987년 171억 달러로 급증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과 카다르의 경제정책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강력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정화 정책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제도의 개혁,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체제의 개혁, 민간기업의 설립 활성화, 소유제도의 개혁, 그리고 시장경제 부문의 확대 등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내 개혁파는 카다르식 통치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급진적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의 정치적 독점의 완화, 당내 민주화 추진, 인권 및 시민권 확대, 그리고 권력분립의 제도화 등을 주장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는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개혁파의 주장이 힘을 얻었으며, 따라서 카다리즘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목표로 헝가리 민주포럼(MDF)이 창립되었고, 창립 대회에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내 개혁파가 대거 참석했다. 1988년 4월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개혁을 목표로 한 청년민주동맹이 독립단체로 창립되었다. 1988년 5월 1일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자유이니셔티브 네트워크(SzKH)가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과학자민주노조(TDDSz)도 설립되었다.

카다리즘의 폐기에 직면한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은 향후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1988년 5월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카다르 중심의 보수파가 교체되고 당내 개혁파를 주도해 온 포즈가이와 네르쉬(Rezső Nyers)가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카다르의 후임으로 당시 수상이었던 그로스가 당 총서기에 취임했다. 당 총서기 겸 수상인 그로스

I
II
III
IV
V
VI
VII

를 중심으로 한 당내 보수파는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했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대세력과 대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당시 지도부는 당내 민주화, 국가기관 및 공식단체의 자율권 확보, 그리고 언론매체의 자유 확대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당의 지도적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정치개혁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안은 새로 등장한 독립단체에 대한 처리문제와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당내 보수파가 만든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초안은 국가안보와 공공 안정의 위배행위에 대한 금지와 정당과 독립노조의 창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파가 마련한 법안들은 개혁파 및 공청회의 반대여론에 밀렸다.

당 중앙지도부 내의 갈등은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의 지방조직이 개혁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화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지방조직의 지원에 따라 개혁파의 중앙당 내 입지는 강화되었으며, 보수파 진영 내에서도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보수파의 주요 인물인 쉬뢰쉬(Máttás Szúrós) 의회 의장이 임레 나지의 복권을 주장했으며, 부다페스트 당 제1서기였던 야소(Mihály Jásso)도 보수파에서 이탈했다. 결과적으로 당내 권력투쟁에서 개혁파가 승리함에 따라 보수파는 주도권을 상실했다.

보수파와 개혁파 간 권력투쟁 상황에서 헝가리 민주포럼(MDF), 청년민주동맹(FIDESZ), 자유민주동맹(SzDSz), 1948년 이전에 연립정부에 참여한 바 있었던 독립소지주당(FKgP), 헝가리 국민당(MNP), 그리고 헝가리 사회민주당(MSzDP) 등이 정치활동을 강화하거나 정당을 창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신생 정당들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했으며,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

었다. 신생 정치 단체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논쟁이 되었으나, 1989년 2월 10일과 11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로스는 다당제의 원칙을 수용한다는 점을 발표했다.

당내 보수파는 다당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지배적 역할 유지와 아울러 총선을 통한 당의 강화 문제에 직면하자 신생 정당과 개별 협상을 통해 이들을 분열시키는 한편, 일부 정당을 보수파 측으로 유인하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신생 정당들이 보수파의 전략에 대응하여 단결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1989년 3월 22일 8개 신생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EKA)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헝가리 정국은 당내 보수파와 원탁회의 간 양자협상 구도로 재편되었다.

1989년 6월 13일 첫 번째 원탁협상이 시작되어 보수파 협상 대표는 그로스가 맡았으나 6월 23과 24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로스가 실각하고 개혁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서 협상 대표단도 개혁파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개혁파와 원탁회의 측 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양측은 경쟁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점 등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인 대통령 선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총선 이후로 확정했다.

1989년 10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유럽 좌파의 성격을 가진 정당으로의 변신을 선언하고 당명을 헝가리 사회당(MSzP)으로 변경했다. 1990년 5월 자유총선에서 헝가리 민주포럼이 총 386석 중 164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이 되었고, 자유민주연합(SzDSz)이 92석으로 제1야당, 독립소지주당(FKgP)이 44석으로 제3당이 되었으며, 헝가리 사회당은 33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총선 이후 헝가리 민주포럼은 독립소지주당 및 기독교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헝가리 사회주의체제가 종식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4. 루마니아: 민중봉기형

루마니아의 탈 사회주의화의 과정은 유혈사태를 수반했으며 차우체스쿠(Nicolae Ceausescu) 개인의 우상화와 독재정치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차우체스쿠 정권의 몰락 이후 자유총선을 통해 집권한 일리에스쿠 정권의 탈 사회주의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상당기간 권위주의적 국가 통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루마니아의 탈 사회주의화는 반 차우체스쿠 민중봉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진행된 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차우체스쿠는 1965년부터 1989년 12월 처형될 때까지 루마니아를 25년간 통치했다. 차우체스쿠는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국내적으로도 강력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서방세계로부터 우호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차우체스쿠는 철권통치를 강화했다. 결국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작은 도시인 티미소아라(Timisoara)에서 발생한 시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소요가 확산되어 차우체스쿠 정권은 붕괴했다.²³

차우체스쿠는 집권기 중 부인 엘레나(Elena)와 친인척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개인 우상화와 극도의 독재체제로 루마니아를 통치했다. 타자기와 컴퓨터는 경찰에 신고해야 했고 외국인과의 대화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루마니아 국민들은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차우체스쿠의 친위대인 비밀경찰(Securitate)에 의해 감시를 받아야 했다. 반면 루마니아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23. 이상환·김웅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pp. 55~57.

1988년 당시 루마니아의 경제는 1945년 수준에서 거의 발전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생필품은 배급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차우세스쿠는 천문화적인 자금을 투자하여 자신을 위한 건축물과 기념물을 건립했으며, 루마니아의 방송과 신문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모든 언론이 차우세스쿠의 업적을 알리는 관변언론의 역할을 했으며, TV 시청 시간도 제약되었다. 1989년 11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그리고 동독 등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가 도미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에도 차우세스쿠는 제14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자신과 가족의 치적을 홍보했다.

이 같은 억압적인 통치와 감시체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민중봉기는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1987년 11월 브라스보(Brasvo)에서 반 차우세스쿠 노동자 봉기가 있었으나 루마니아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 후 1989년 구 공산당료 출신 6인²⁴이 서명한 차우세스쿠 폭정과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해외에서 출판되었으며, 이들은 이후 모두 가택 연금되었다. 1989년 12월 14일 발생한 티미소아라 사건은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 루마니아 비밀경찰이 티미소아라에서 차우세스쿠를 비난한 헝가리계 목사 라슬로 튀케시(László Tókes)를 체포하려 하자 이웃 헝가리 소수민족들이 이를 막기 위해 그의 집 주변에 몰려들었다. 이후 헝가리계 주민들에게 루마니아인들이 합세함으로써 점차 시위로 확대되었다. 12월 17일 차우세스쿠는 티미소아라 시위를 난동이라고 규정하고 발포 명령을 내림으로써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²⁴ 루마니아 공산당 창당 멤버였던 Constantin Parvulescu, 전 정치국원 Gheorghe Apostol, 전 주민대사 Silviu Brucan, 전 외무장관 겸 연방의회 의장 Colneliu Manescu 등.

I
II
III
IV
V
VI
VII

12월 21일 차우세스쿠는 티미쇼아라 시위의 진압을 자축하기 위해 생중계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카레스트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었다. 연설 도중에 한 청년이 차우세스쿠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차우세스쿠가 연설을 중단하고 청년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경찰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군중들이 순식간에 반 차우세스쿠 시위대로 바뀌었으며, 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밀리아(Vasile Milea) 국방장관이 차우세스쿠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자살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자 국민들은 차우세스쿠에 의해 처형당한 것으로 확신했다. 이 사건은 차우세스쿠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군대가 반 차우세스쿠 민중봉기에 가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군이 시위대에 합류한 다음날인 12월 22일 차우세스쿠는 부인과 함께 별장으로 피신하였으나 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 차우세스쿠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비밀경찰이 반격함으로써 군과 비밀경찰 간 군사적 충돌이 수일간 지속되었다.

시위 및 비밀경찰과 군의 충돌과정에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방송국을 점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차우세스쿠 비난 출판물의 해외 출간 이후 가택연금 상태였던 6인 중 한 명인 전 연방의회 의장 마네스쿠(C. Manescu)는 대국민 연설방송을 통해 군대가 시위대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위대를 보호하려는 군대와 제압하려는 비밀경찰 간의 시가전은 탱크가 동원되는 등 전시 상황과 유사했다. 결국 군의 승리와 아울러 차우세스쿠 독재정치와 루마니아 사회주의체제도 붕괴되었다. 시위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 시민, 반체제 지식인 대표로 구성된 민중해방협의회(National Salvation Council)를 발족시키고 임시정부 역할을 수행했다. 민중해방협의회는 1970년대에 차우세스쿠를 비난한 이유로 숙청당한 이안 일리에스쿠(Ion Iliescu)가 주도했다.

차우세스쿠 부부에 대한 신속한 총살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루마니아 정국은 안정되지 않았다. 차우세스쿠 정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1990년 1월 7일 구 공산당 출신과 차우세스쿠 주변 인물로 구성된 신임 각료의 구성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발생했다. 이제 민중시위는 차우세스쿠가 아니라 정권을 장악한 민중해방협의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민중시위로 인해 민중해방협의회는 1990년 2월 1일 시위대와 협상을 갖고 1990년 5월 20일 자유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총선 결과 일리에스쿠가 85%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민중해방협의회도 65%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일리에스쿠 정권의 통치방식은 차우세스쿠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리에스쿠 정권 역시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주요 언론 매체를 통제하였고, 반체제 세력들을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 6월 10일 학생 시위가 발생하자 일리에스쿠는 비밀경찰조직을 복원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차우세스쿠 체제의 종식 이후 루마니아에 등장한 것은 민주화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였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민중혁명을 수반했으면서도 민주화를 완성하지는 못한 미완의 혁명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²⁵

²⁵ 황병덕 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269.

I
II
III
IV
V
VI
VII

표 III-1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 국가별 특징²⁶

국가 특징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방향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주도세력	노동자	반체제 지식인	당내 개혁파	대중
형태	개혁과 혁명	혁명	개혁	혁명
주요 집단	솔리대리티	시민포럼, 비폭력시민연대	공산당 내 개혁파	대중
협력집단	지식인, 학생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	신생독립단체	군대
주요인물	비웬샤	하벨, 두브체크	포즈가이	일리에스쿠
주요 사건	'80년 크레인 기사 해고 '84년 반체제 신부 살해	'88년 '프라하의 봄' 기념 집회 '89년 시위학생 사망설	'88년 독립단체 창립 '89년 지방당 조 직 개혁파 지지	'89년 티미소아라 사건 '89년 국방장관 발포명령거부 자살
수단	파업, 시위	집회, 시위	공산당원 이탈	대중봉기
폭력	정부 무력사용	정부 무력사용 사망자 없음	비폭력 사망자 없음	무력충돌 대규모 희생
요구	노조합법화 자유총선	'프라하의 봄' 정신 정부퇴진	정치·경제 개혁	차우세스쿠 퇴진
운동 기간	'80년 ~ '89년 (약 10년)	'89. 11~12 (약 23일)	'88. 5 ~ '89. 10 (약 15개월)	'89. 12. 14~25 (약 11일)
언론	주요사건 보도	'89년 11월 시위 보도 12월 언론통제불능	적극 보도	시위대 점령

26. 이은구, “폴란드·루마니아 탈사회주의 정치변혁의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동유럽』, 제2권 2호 (서강대 국제지역문화원, 2011), p. 23.

IV

동유럽 체제전환의 북한 시사점



1. 경제위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과정은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된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생필품 부족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의 국제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한 고르바초프의 개혁도 방치할 수 없는 소련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북한 역시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원인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라는 점에서 동유럽 국가들과 공통점이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말기에 이르러 심각한 생필품 부족 사태를 겪었으나 기아난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시점에서도 빵을 비롯한 식량은 부족하지만 대체로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를 보인다. 동유럽의 경우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의 제기와 사회주의 당국의 대처 과정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행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북한의 경우 경제위기가 보다 심각한 형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규모의 아사사태를 경험했으며, 이후에도 구조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7·1조치와 6·28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경제회생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의 해소 방식과 개혁 방향의 선정을 둘러싼 노선투쟁도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은 동유럽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경우 개혁·개방 과정에서 치열한 이념투쟁과 갈등을 겪었다.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로 천문학적 인구가 아사했으며, 이는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개혁·개방에 대한

I
II
III
IV
V
VI
VII

목시적 동의를 배경으로 작용했다.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빼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은 성공적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될 필요성을 인지한 결과였다.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간 격렬한 이념투쟁 및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보수파에 의한 반 고르바초프 쿠데타가 발생했다. 빼레스트로이카 추진 과정의 갈등은 결국 고르바초프와 보수파 모두의 실각과 아울러 소련체제의 해체로 귀결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열친체제에 의한 급진적 방식의 시장화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심화된 구조적 경제위기도 불구하고 개혁·개방과 관련된 이념투쟁이나 지도부 내의 이견 등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의 분조제 축소, 기업의 자율성 제고, 그리고 배급제와 시장가격제 혼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28방침은 북한체제의 특성에 비추어 효과가 의문시된다. 6·28방침은 중국이 1978년부터 시도한 농가생산책임제, 이중가격제, 기업개혁, 그리고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 정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상당한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의 북한과 1978년의 중국은 개혁·개방의 출발조건(Initial Condition)이 다르다. 1978년 중국은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인 사회주의 저발전 농업국가였다. 따라서 농업개혁은 경제개혁의 핵심적 과제였으며, 그 파급효과도 컸다. 농업생산력의 확대와 농촌과잉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저임노동에 기반한 중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도시인구가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농업국가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공업국가에 해당한다. 북한경제문제의 본질은 공업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 위기의 상당부분은 공업부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위기는 협동농장체제의 비효율성과 아

올려 비료와 농약, 연료 및 전기 등 공업분야로 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업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시장화 정책과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업부문의 회복 없는 농업개혁은 한계가 있다. 관심의 대상인 분조제의 축소도 초기 중국의 조치보다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가계단위(Household)로 농업생산단위를 축소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생산과 생산물에 대한 개인적 소유관계를 명확히 했으며, 이는 중국농업생산력의 급속한 향상의 원인이었다. 공동작업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농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가 독립적인 단위인 개인 또는 가구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나, 6·28방침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²⁷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개선 노력도 한계가 있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농업정책의 실패와 아울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 경제관계의 축소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성 원조가 중단되고 시장 거래 관계가 정착되면서 북한은 필요물자의 유입에 심각한 한계에 직면했다. 따라서 대외 경제관계 개선은 북한으로서 매우 시급한 현안에 해당한다. 중국은 경제특구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조치를 통해 화교자본의 직접투자를 비롯해 국제 자본의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 시도는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신뢰성 없는 조치로 인해 국제 자본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제재는 북한 개방에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의 심화는 북한의 고육책이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I
II
III
IV
V
VI
VII

²⁷ 조한범,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4, 2012.12.28), pp. 3~4.

존도의 심화는 북한이 중국 경제발전전략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여, 북한의 경제적 자율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북한은 최근 곳곳에 경제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 그러나 체제 내적 개혁과 시장화가 수반되지 않는 개방이 국제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의 심화는 북한의 사회통제를 위한 자원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핵심 지지계층에 대한 특혜와 차별적 배급을 통해 체제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핵심 지지계층에 대한 특혜도 국제제재의 지속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부자원의 유입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 당 간부와 군부대 배급도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핵심 지지계층에 대한 차별적 특혜조치까지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북제재의 지속은 북한경제위기 해소의 어려움과 아울러 김정은 체제의 지지기반 및 충성세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지지층에 대한 특혜 축소와 장기적인 경제난의 지속은 사회 통제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탈북자의 지속적 증가와 생계형 월경의 일반화는 북한의 사회통제 시스

28. 조한범,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4, 2012.12.28), p. 4.

29. 『연합뉴스』, 2013년 11월 13일.

30. 2012년 4월의 경우 북한의 도 인민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식량공급이 완전 중단되었으며, 도당 및 도 보안부 간부들도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 대해서는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위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기관들의 식량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일반 군부대도 비상식량공급체제인 1일 공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2012년 5월 3일.

팀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국경수비대 및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의 만연 등으로 북한의 통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통제력의 약화는 밑으로부터의 저항을 억제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안간부들의 피살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주민감시와 통제의 일선에 있는 공안 간부들에 대한 공격은 북한에서 중대 정치범죄로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점차 현재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² 북한의 구조적 경제위기 심화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부재는 다양한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2. 시민사회

동유럽의 사례는 평화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동유럽의 시민사회는 사회주의 공업화 수준, 종교의 영향, 그리고 사회주의체제 이전 자본주의화의 진전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폴란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시

31. 치안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양에서도 2012년 초 평양의 보안서 감찰과정이 피살되었으며, 2011년에는 보안서장(경찰서장급)이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양강도에서 김일성정치대학의 강좌장(준장급)이 피살되었다. 『동아일보』, 2012년 4월 2일자 기사 참조.

32. 조한범,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p. 8.

I
II
III
IV
V
VI
VII

민사회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는 핵심적 에너지로 작용했다. 체코의 경우도 시민사회는 체제변혁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엘리트가 주도한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급격한 정치 변동이나 과도기적 아노미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공산당 지도부가 주민생활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노력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공존에 성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시민사회의 요소가 결여된 체제전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루마니아에서 장기간 지속된 독재로 인한 철저한 통제와 억압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억제했으며, 따라서 탈 사회주의화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루마니아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처형이라는 극단적 정권교체 방식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분야의 내적인 변화보다는 구체제의 관성이 지속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라는 대체 세력이 없는 루마니아는 체제전환 혼란의 극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차우세스쿠가 사라진 뒤에도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북한에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은 사회관계망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조적 경제위기는 북한의 사회관계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관계망, 사적 관계망, 그리고 공적 관계망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³³ 공동체적 관계망은 전통사회의 촌락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개인,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된 소규모 집단에서 주로 대면적 접촉을 통해 맺어지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사적 관계망은 사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주변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공적 관계망은 사익보다 전체사회의 공익

33.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창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5), pp. 106~107.

을 앞세우고 당국가의 유일 지배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사회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예외 없이 인민반 조직이나 직맹, 여맹 등 각종 근로단체와 당조직과 같은 공적 기구에 속해있다. 이 공적 조직들은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통해서 직장과 지역사회 내의 공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거점으로 기능했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직업 안정성의 약화와 배급제의 와해는 국가에 의한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보호막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는 사회주의적 완전고용과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을 관료제적 통제체제로 통합시키던 기존 공적 관계의 존립기반의 약화를 의미했다. 생존을 보장해주던 공적 관계망의 약화에 따라 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생존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북한의 공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이 발생했으며, 대신 사적 관계망과 비공식적 관계망이 확대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모순과 배급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묵인한 비공식적 시장화 추이와도 관련이 있다. 공적 관계망과 공동체적 관계망이 사적 관계망으로 포섭되거나 변질되는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³⁴

북한의 체제위기와 경제난으로 인한 공적 관계망의 해체 경향과 사적 관계망의 확산은 사적 담론이 소통되는 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의 공적 담론과 달리 비공식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적 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³⁵ 첫째, 사적 담론은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이해관계와 물질에 대한 담론 중심이다. 사적 담론은 사회주의 이념 중심인 공적 담론과 달리 소비나 상행위, 생계 등 경제영역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둘째, 일상생활과 개인적 관심이 담론의 중심

34. 위의 글, pp. 121~126.

35.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 2008), pp. 178~179.

I
II
III
IV
V
VI
VII

이 되고 있다.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사적 담론의 특성이 기존의 정치성과 집단주의를 우선하는 공적 가치체제와 상이함을 의미한다. 셋째, 담론의 소재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과 일상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 및 정세 등 다양한 소재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새롭게 형성되는 북한의 사적 담론의 형성 과정이 아직 공적 담론과 대립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적 관계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적 관계망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주의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이다. 자본주의 질서에서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공공성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적 시장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 사적 관계망과 사적 담론의 재생산 경향은 시민사회의 전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분화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질서를 넘어서는 자율적 공공성의 질서를 필요로 한다. 공공성의 질서는 시민이 생산하는 공적 가치와 이를 추구하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적 관계망은 공공적 관계라기보다는 사적 이익의 관계에 머물고 있으며, 사적 담론 역시 경제적이고 개별적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의 사적 관계망과 사적 담론은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잠재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저항행동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저항의 형태에 머물고 있다. 일상적 저항은 생계를 위한 지하경제 참여에서부터 생계형 범죄, 빼라·낙서 등 초기적인 체제 비판 행동 등을 포함하며, 탈북 역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³⁶ 일상적 저항은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소극적 저항으로 정치권력의 지배 망과

체제규범을 벗어나는 행동들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북한의 사적 관계망과 사적 담론 그리고 일상적 저항의 여러 형태들은 잠재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와 국가권력 간 잠재적 갈등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사회의 경우 구조화된 갈등사회로 전환의 과정에 있는 잠재적 갈등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³⁷

동유럽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민사회적 요소가 발전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공산당의 정권교체 및 체제전환이 시도될 경우에도 이후 민주화 및 시장화의 성패에 있어 북한시민사회의 발전정도 및 역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시민사회적 요소 및 사회운동 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징후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북한에서 반 체제저항 운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서 집권세력의 권력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탁회의나 사회세력의 정치화 등 동유럽의 사례가 재연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 북한시민사회의 전망은 경제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사회 내적 변화의 조직화 및 체계화 여부와 아울러 한국과 외부 세계 영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6.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한 배급제의 붕괴와 비공식적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에서도 범죄 및 뇌물,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관계에 대한 국가와 관료의 공식, 비공식적 수탈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불법행위 가운데 체제 위협의 우려가 있는 여러 행위들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 월경, 밀수, 마약, 남한 비디오 시청 등이 감시 및 보고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절도, 강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원, 보안원 등 보안 관련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살인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난 및 체제위기심화로 인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 및 사회주의체제 정당성의 위기는 북한사회의 내적 해체를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증가하는 사회문제는 북한체제의 원심력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7. 조한범·양문수·조대업,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43~48.

I
II
III
IV
V
VI
VII

3. 종교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난은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어렵게 하는 물리적 요인이다. 약속했던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아닌 배타적 특권층의 지배 아래 만성적 경제난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사회주의 공식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이었다. 사회주의체제 말기의 위기 상황은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이 같은 공백 상태는 동유럽의 긴 기독교적 전통의 현재화와 종교의 확산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다. 동유럽의 종교는 시민사회요소와의 협력 또는 동반자관계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강했던 폴란드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기성종교의 부활과 아울러 신흥종교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종교에 대해 억압정책을 가했던 소련의 경우도 북한과 일정 정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스탈린 사망 후의 소련은 북한보다 자유로운 사회였으며, 러시아 정교는 오래 전부터 강한 민족주의 전통을 견지하고 있었다.³⁸

북한의 경우도 장기적인 위기의 심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공식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이를 대체하는 대체 이데올로기에 대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종교적 전통이 다른 북한에 동유럽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유럽의 알바니아와 더불어 종교의 억압정책에 있어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종교 말살정책을 시작했으며, 1953년 이후 1988년까지 북한에서 예배가 가능한 교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에서

38. “北 체제전환 후 종교부흥 가능성 높다,” 『Daily NK』, 2005년 5월 1일.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상범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이 같은 흐름에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 등 공식적인 성소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 종교정책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³⁹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적인 종교 교류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북한 역시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종교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그리고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등 연맹활동으로 종교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반 종교정책에 따라 신앙 1세대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지만 2, 3세대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체제위기의 해소를 위한 외부 지원의 확보와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해 종교 교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 종교의 위상도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던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 등의 종교기관은 남북교류의 확대 과정에서 대북지원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인 실적을 거둠에 따라 점차 위상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 종교지도자들의 사회적 신분상승과 핵심권력집단에 진입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제위기와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 내부에 사적인 종교활동의 맹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적 종교활동의 영역도 각 종단별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³⁹ 김상철,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민화협 정책위원회, 2003), pp. 196~197.

I
II
III
IV
V
VI
VII

그러나 북한의 종교적 상황은 종교와 시민사회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동유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체제전환과정이 진행된다고 해도 종교가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종교의 영향력 확대는 향후 북한위기구조의 변화 양상과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약화 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4. 불평등의 확산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적 시장화 현상과 사적 경제 영역의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시장경제 및 경쟁체제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시장활동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노동시장 등이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북한시장과 사적 경제 영역들은 제도적 불완전성을 권력관계와의 유착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의 사적 경제 영역의 확대와 이로 인한 자본축적,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형성 과정은 현 단계에서 북한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시장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종의 기생형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시장의 경우 생산과 유통구조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시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산구조가 뒷받침되는 소상품 구조의 형성과는 거리가 먼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족한 공식 배급품목들을 비공식적 시장

40.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5~11.

으로 빼돌려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과정에서 관료와 시장 간 이해관계의 관철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기 및 체제전환기에 상당기간 존속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경유착형 유산계급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던 국가권력 및 공권력의 일시적 약화 과정을 수반한다. 소련의 경우 체제전환기 국가 통제력과 조절기능의 약화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의 발생과 사회문제의 확대 경향을 나타냈다. 공권력의 약화는 사회주의체제로부터 기원한 지하경제를 통제하는 한계를 보였으며, 불법적 방식으로 구체제의 특권을 사유재산으로 이전하는 엘리트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막는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체제전환의 효율성 및 새로운 계급·계층구조 형성의 정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관료와 엘리트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주의 와해기와 탈 사회주의체제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경제권력을 행사했다. 러시아의 사례는 구체제의 지배 엘리트들이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기와 전환과정에서 지대추구행위와 불법적 경제행위 등을 통해 특권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유산계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사회주의체제의 와해 및 체제전환의 과정은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주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체제 와해기의 구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대중들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체제전환기의 시장화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와 아울러 완전고용 노동시장의 재편을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와 달리 대중적인 궁핍화와 하향 이동 경향이 발생한다. 대중적 궁핍화에 직면한 일반인들과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I
II
III
IV
V
VI
VII

상층부 간 빈부격차의 확대는 새로운 사회갈등 구도를 형성한다.

7·1조치 이후 비공식적 시장화 과정을 통해 북한에서도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참여 여부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세력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¹ 빈부격차는 평등체제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에게 생소한 것임과 동시에 부의 축적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의 사회적 기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외부 정보의 유입

소련체제의 붕괴를 서방의 고립정책이나 고르바초프 개혁의 직접적 결과로만 보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 소련의 경험은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외부 정보의 유입, 특히 자발적인 정보의 유입과 확산이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신뢰감의 철회 및 체제 저항적 성향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했다.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국제제재는 해당국의 경제적 어려움의 악화를 통해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킴으로써 정권이 결국 국제제재에 굴복한다는 전략에 기반한다. 그러나 국제제재는 목표가 되는 지도자나 정권만 특화해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 일반 주민의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련 체제의 붕괴 경험은 공산당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서방의 고립

⁴¹ 조한범,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pp. 97~108.

주의 정책이나 제재가 아니라 내적인 모순과 변화였음을 증명했다. 특히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외부의 정보를 소련사회 내에 유입시킴으로써 체제변화의 중요한 동인을 제공했다.

북한체제 역시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외부 정보 유입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남북교류는 북한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⁴² 북한주민들의 대다수는 정상회담 이후 치러진 남북 민족공동행사, 대북지원, 남북경협을 포함한 남북교류 전반과 한국사회의 발전상을 알고 있다. 2002년 북한 TV는 한국의 국력신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월드컵 개막전 경기를 방송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한국상품에 대해서도 북한 내에 비공식적인 해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까지 북한 당국은 한국상품을 사용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해외근무자들은 상표를 떼어내 사용할 수 있는 의류 등에 한정해 한국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국경 세관에서 북한의 해외근무자들이 소지한 한국상품을 회수하지 않아 북한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⁴³ 북한의 일부 장마당에서 한국제품들이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되었으며, 한국제품들은 북한이나 중국제보다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⁴⁴ 최근 평양의 복합 문

42. 조한범,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가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참조.

43. 『연합뉴스』, 2001년 6월 6일자 기사 참조.

44.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는 한국 상품이 최상급의 품질로 취급되고 있으며, 중고품이라도 중국의 새 상품보다 비싸고 잘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호, “방북단 사건, 남한의 현실, 미국 테러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생각: 북한은 지금 한류(韓流)열풍, 돈 열풍,” 『keys』, 10월호 (2011) 참조.

I
II
III
IV
V
VI
VII

화·쇼핑시설인 해당화관에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를 동반하고 방문한 장면이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인 라네즈(LANEIGE)의 매장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은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⁴⁵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방송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방송은 북한의 일반 주민과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단파와 중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을 말한다. 대표적인 대북방송은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한민족방송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등이 있다. 한국 민간차원의 대북방송으로는 열린북한방송(ORNK), 자유북한방송(FNK), 자유조선방송(RFC), 그리고 북한개혁방송(NKRR)이 있다. 극동방송(FEBC), 광야의 소리(CMI), 순교자의 소리(VOM), 북방선교방송(TWR), 희망의 소리(AWR) 등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방송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대북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남북 일본인 피해자들을 위한 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향의 바람, 시오카제 등이 일본에서 운영되는 대북방송이다.⁴⁶

대북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라디오 보급률도 주목의 대상이다. 북한의 라디오 보유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120만대에서 300만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단파라디오는 20만대에서 100만대, 중파라디오는 100만대에서 200만대로 추산된다. 그러나 아래의 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북한주민의 상당수가 외부 라디오 청취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⁴⁷

45. 『NK조선』, 2013년 4월 29일자 기사 참조.

46. (사)남북언론연구회·RFC 자유조선방송, 『대북방송백서 2013』 (서울: (사)남북언론연구회·RFC 자유조선방송, 2013), pp. 13~15.

47. 위의 책, p. 94

표 IV-1 북한주민의 외부 라디오 청취율조사

조사기관 구분	언론재단	인터미디어	국방연구원	북한인권 정보센터
비율	18.2%	22.8%	15.5%	19.8%
전체 응답자수	103명	291명	71명	1,486명
발표년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조사대상	한국거주탈북자	중국거주탈북자	한국거주탈북자	한국거주탈북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북한 내 휴대전화도 외부 정보의 유입과 확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3년 11월 현재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는 230만 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대한 개별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체제에 위협이 되는 특정한 단어들을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김정은 암살, 폭발, 탈출” 등 북한 당국이 의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보위부가 관련자를 색출·체포한다는 것이다.⁴⁸ 이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에도 이미 정보 확산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가족과 어렵지 않게 통화를 하고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특정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일시에 정보가 확산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8. 『동아일보』, 2013년 11월 26일자 기사 참조.

I
II
III
IV
V
VI
VII

6. 체제 신뢰

대부분의 전문가와 관련 연구들은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최근 재스민 혁명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장기간 진행된 서방의 공산권 연구는 사회주의체제 불변론에 매몰되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중동 연구 역시 이슬람체제의 특수성과 중동의 국제정치에 주목함으로써 재스민 혁명을 전망해 내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된 연구와 분석들이 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중동의 체제 내구력 평가에 있어서 편협된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권력체제의 안정성과 외교안보적 능력은 체제의 내구력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동 재스민 혁명을 촉발한 사회 내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말기의 경우 주민들은 구조적인 경제위기와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주민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전해지는 정보를 통해 자본주의체제의 물질적 풍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체제경쟁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주의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작은 계기도 급격한 정치변동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계기들은 우발적인 사건들이었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유혈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주민들의 내적 신념체계 속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⁴⁹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과 중동의 국제정치적 맥락에 주목한 많은 논의들 역시 재스민 혁명의 예측에 성공하지 못했다. 재스민 혁명에 성공했거나 진행 중인 국가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독재체제에서 고물가, 고실업, 그리고 만성적인 부패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주민들은 특권층의 부패와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살인적인 실업률에 시달렸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장기 독재체제를 강요당했다. 재스민 혁명의 촉발요인은 생존권을 위협받은 한 노점 청년의 분신이라는 우발적 사건이었지만 주민 봉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호소력으로 작용했고, 봉기는 곧 이어 중동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재스민 혁명이 발발한 국가들의 주민들에게 기존 체제에 대한 내적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철회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형상의 안정성 이면에 사회 내의 균열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분석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성과 중동 국가의 권력구조 안정성 및 국제정치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던 반면, 사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⁵⁰

북한의 잠재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민사회와 장기 지속형 독재체제, 철저한 통제 및 감시체제 등은 체계적인 저항세력의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대다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에 있어서 변화의 동인은 집권세력 간의 권력투쟁과 정치적 급변사태, 그리고 체계적인 저항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동 재스민 혁명의 경우에도 외견상 이상이 없던 국가들에서 사소한 계기에 의해 주민의 봉기가 일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사회주

49. 조한범,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03, 2012.1.9), p. 1.

50. 위의 글, p. 2.

I
II
III
IV
V
VI
VII

의체제와 중동 국가들에서 안정적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내면으로부터 철회되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대부분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는 사소한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비교적 평화로운 비 유혈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재스민 혁명 역시 작은 촉발요인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외형상의 평온의 이면에 이미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냉소와 신뢰의 철회라는 근본적 체제위기 요인이 내재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점은 경제위기의 심화로 기아와 일상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북한에서도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배급제의 와해와 아울러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는 북한주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배급제의 잦은 중단과 비정상적인 작동은 북한사회주의체제가 담당해야 할 주민에 대한 부양의무의 포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생존의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강제적 수탈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재정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2009년 실시된 화폐개혁은 당국에 의한 시장자본의 강제적 몰수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신뢰감 약화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약속해 온 강성대국의 징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신뢰감 약화는 북한체제의 보이지 않는 균열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변동은 절대적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보다는 기대가 좌절되는 국면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에 입각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 볼 수 있다. 테드 거는 상대적 박탈감을 열망적 박탈감(Aspirational Deprivation), 쇠퇴적 박탈감(Decremental Deprivation), 그리고 진보적 박탈감(Progressive Deprivation)으로 구분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⁵¹ 거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폭력을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거의 이론은 좌절이 공격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좌절-공격(Frustration-aggression)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가 정치적, 집합적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한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 및 집단적 차원을 포함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기대와 실제 상황 간의 괴리, 또는 실제 능력과 기대 간의 차이를 말한다. 거는 혁명이라는 거시적 현상을 개별 성원들의 불만과 심리적 불안정 등 인성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테드 거의의 분석 방식은 혁명이라는 거시 사회학적 대상을 개별 구성원의 인식과 행위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거에 따르면 혁명은 국가 구성원들의 기대치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 능력 간의 간극이 커질 때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증대되며 정치폭력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거의 결론은 국민들의 사회적인 기대치가 실제 체제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실제 만족도를 넘어설 경우 대중적인 사회 심리적 좌절을 야기하며 이는 정치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²

⁵¹ 열망적 박탈감은 국민들의 기대는 상승하는데 비해 실제로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체제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근대화의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쇠퇴적 박탈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급속히 높아지지 않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제의 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진보적 박탈감이란 사회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같은 기대의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발생한다. Ted R. Gurr, *Why Men Rebel* (Herndon: Paradigm Publishers, 2011), pp. 46~56.

⁵² 박형중·조한범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pp. 162~163.

I
II
III
IV
V
VI
VII

V

북한사회의 위기구조



1. 식량배급제 와해

가. 식량배급제 변화과정

북한에서 배급제란 “국가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의 소비와 분배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을 판매, 공급하는 임시적인 제도”⁵³로 규정된다. 북한은 해방 이후 심각한 물자 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배급제를 실시했다. 1946년 3월부터 실시된 북한의 배급제는 국영기업소를 중심으로 양곡에서 시작하여 1947년부터 공업제품들로 확대되었다.⁵⁴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배급제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제외된 사람들은 자영농업 또는 상거래를 통해 식량을 확보해야 했다. 한국전쟁에 따라 배급제는 확대되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시 원조로 배급제는 지속될 수 있었다. 1957년 11월 북한의 내각 결정 제 96호, 제102호에 의해 양곡 판매제가 폐지됨으로써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가 실시되었다.⁵⁵ 식량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의 배급소에 소속된 직장에서 발급받은 양권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식량을 수령할 수 있었다. 주민의 신분과 직위,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 배급량 및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이 달랐다.⁵⁶ 그러나 식량을 제외한 모든 소비품에 대해서는 배급제가 폐지되어 국영상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⁵⁷

53.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66.

54.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p. 77.

55.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 165.

56.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p. 77~78.

57. 『프레시안』, 2006년 5월 7일자 기사 참조.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은 1960대 후반 식량 완전 배급제를 실시했다.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본격화로 인한 군수물자의 비축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강화에 따라 1960년대 후반 수확량과 관계없이 농민들에게도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정량의 식량이 공급되는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시 군량미 비축으로 인한 식량수요 증가와 아울러 농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애국미’ 납부라는 형태로 식량 배급량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당시 15일치의 식량 배급량 중에서 2일분의 식량이 애국미 명목으로 사전 공제되어 지급되었다.⁵⁸ 북한 인구의 증가도 식량부족 및 배급량 축소의 한 원인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생필품 공급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에 대한 수량 제한이 강화되었다. 이전의 경우 북한주민들은 국영 상점에서 식료품과 공산품의 구입에 있어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공급카드의 등장으로 상당수 생필품들이 구입 수량에 제한이 있는 배급제로 바뀌었다.⁵⁹ 1970년대 경제적인 한계에 직면하자 북한은 차관 및 대외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일쇼크와 저성장 등의 문제로 결제외화의 부족상태가 발생함으로써 북한은 결국 1976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기업과 생산시설들에 대한 원자재공급의 차질을 초래했으며, 식량 및 생필품 공급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은 북한의 장기적 경

58. 양문수,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집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p. 57.

59. 양문수,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집체 메커니즘의 형성,” p. 57; “1970년대 말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이른바 ‘공급카드제’가 등장, 배급제가 사실상 부활했다. 모든 소비품에 대해서는 아니었지만, 웬만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배급제로 전환됐다.” 『프레시안』, 2006년 5월 7일자 기사 참조.

제침체가 시작된 시기로서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 실시의 배경이 되었다.⁶⁰ 그러나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식량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북한 배급제는 시행 초기부터 대상에 따라 배급 품목의 양과 질, 그리고 배급 빈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물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차이는 보다 확대되었다.

표 V-1 차등적 식량배급제⁶¹

공급계층	해당성분	공급량	공급처	비고
매일 공급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 서비스 요원 등	쌀 700g(백미10:잡곡0), 잡곡 세 가지, 육류 15~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 계층
1주 공급대상자	중앙당 부부장, 내각 부총리, 제1호 고급장교, 장성급 장교 등	식량 700g(백미7:잡곡3), 잡곡 세 가지, 육류, 야채, 맥주, 담배 등 필요량(매일 공급대상자와 비슷)	당 재정 경리부	특별 계층
2주 공급대상자	내각 부장, 부부장,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 내각 각 부처 국장, 과장, 항일투사 유가족, 영웅칭호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백미와 잡곡을 7:3 또는 5:5), 육류 1~6kg, 생선 1~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급카드 제시(1~4 호 공급소)	관직 소유
인민반 공급대상자 (15일마다 공급)	노동자, 사무원, 농민 등	식량 700g(백미2:잡곡8, 농촌은:9), 생선 가구당 1개월 에 1kg, 육류 명절에 특별배 급 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 배급소	일반 인민

60. 양문수,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pp. 57~58.

6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3~2002년)』 (서울: 북한연구소, 2003), pp. 277~278.

차등적 배급제의 실시로 배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필품에 대한 수요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배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개인부업이나 장마당 및 농민시장을 허용한 것은 물자 부족에 기인한 식량배급제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북한경제문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였다. 결제를 위한 경화의 부족으로 북한의 에너지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농기계 및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차질로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가해진 자연재해는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북한체제의 최대 시련기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행군기(1995년~1998년)에는 배급제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배급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었으나 이는 가동되는 공장 및 기업소의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당시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⁶³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중단되거나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상황을 반복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자료를 활용한 아래의 표는 북한 식량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1990년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62.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1994), pp. 518~519.

63. 『프레시안』, 2006년 5월 7일자 기사 참조.

표 V-2 1990년대 중반 지역별 배급 감량 및 중단시점⁶⁴

지역	감량배급시점	배급중단시점
평양시	1995년 9개월 1996년 2개월분 배급	감량배급지속
평북, 신의주	1993년부터 배급간격이 불규칙 1994년 5개월분 배급	1995년
함북 함흥	1993년 3개월분 배급	1994년
평남 양덕	1994년 2~3개월분 배급	1995년
함북 회령	1992년 말 월 3kg로 감소	1993년 중반
개성시	1992년 이후 5달 이상 중단	1996년 1~7월까지 1개월 치 배급

배급제의 중단은 암시장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북한주민의 상당수는 시장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⁶⁵ 식량난민 472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제2경제제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대상의 약 92%가 장사, 매각, 그리고 사적 경작 등의 제2경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주민들은 주곡의 60%, 생필품의 70%를 시장에서 조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⁶

64.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 330.

65.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직매점 이외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으로서 10일 마다 서는 농민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언제 어디서나 개설됨으로써 사실상 암시장화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농민시장의 거래품목, 규모, 시기 등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목인이 반복되다가 1992년 들어 그간 묵인되었던 비인가 시장을 폐쇄하고 매일장을 10일장으로 전환하는 등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때 ‘농민시장 관리사업소’에서 물건 양에 따라 2~15원 정도의 장세 징수를 엄격히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는 속칭 ‘유동장’이라 불리는 사실상 매일장과 마찬가지로인 파행적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1993년 3월을 전후하여 10일장이 다시 매일장으로 환원되었다. 결국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농민시장은 확대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암시장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p. 88~89.

표 V-3 북한시장의 변천 과정⁶⁷

기간	명칭	개설빈도
해방~1950년	인민시장	-상설시장(도시) -3일 혹은 5일장(농촌)
1950~1958년	농민(촌)시장	-매일장(도시) -3일장 혹은 5일장(농촌)
1958~1969년	농민시장	-10일(매월 1,11,21)
1969~1982년	농민시장	-10일(농촌지역) -주요도시 중심지역 시장 폐쇄(변두리 이전)
1982~1987년	농민시장	-상설시장화(1982) -1984년 5월부터 숫자 확대
1987~1990년 초	농민시장 (장마당, 야시장)	-주일장(매주 일요일) 전환(1987) -다시 10일장으로 전환
1993년~현재	농민시장 (장마당, 야시장, 자유시장)	-매일장(상설장) 전환(1993) -농민시장 기능 급격히 확대

2002년 시행된 7·1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7·1조치는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시장을 통해 기존의 배급제를 보완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아닐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⁶⁸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시장 참여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2005년 10월, 북한 당국은 양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면서 식량배급제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이는 일시적이었다.⁶⁹ 양곡의 시장

66.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99.

67. 통일부 정보분석실, 『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서울: 통일부, 1999), p. 16.

68.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서울: 한울, 2012), p. 91.

69. 당시 함흥에서는 10월과 11월 쌀과 옥수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으나 12월에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에는 식량 공급이 명절에만 공급되는 등 현저하게 감소했다. “흔들리는 배급제…자력갱생적 시장경제의 길,” 『프레시안』, 2006년 5월 7일.

유통금지에도 불구하고 배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암시장적 요소는 오히려 증가했다.⁷⁰ 배급의 부족분은 결국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FAO와 WFP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최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⁷¹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곡물생산 증가로 식량배급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⁷²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북한의 쌀값은 2013년 4월 이후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소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식량 배급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의 생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나. 식량배급제 와해의 영향

북한 식량배급제는 부분적 시행 및 퇴행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1년 현재 FAO와 WFP, UNICEF가 실시한 현지조사에

70. 권영경,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수은북한경제』, 2012년 가을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2), p. 19.

71. “2000년 이래 식량생산부문은 전체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근의 생산수준은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곡물 생산은 2009년 이래 연속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조곡 500만톤 생산을 달성했다.” 김영훈,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 및 농업,”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7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39.

72. “올해 4, 5, 6월에는 쌀값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쌀값의 하락세는 환율의 하락세보다 가파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 달러로 표시한 쌀값은 급격하게 하락해 평양의 경우, 1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북 소식지들은 국가의 배급 확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북한정부가 갑자기 배급을 늘린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소식지들은 북한정부가 2호미라 불리는 전쟁 예비물자(전시 비축미)를 풀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문수,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7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59~60.

I
II
III
IV
V
VI
VII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식량배급에 관해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식량증산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식량배급제의 비정상적 작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량배급제의 비정상적 운영과 아울러 차등적 배급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부족 문제는 당·군경제와 일반경제로 나뉘어져있는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현상과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⁷³ 식량부족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당과 군대, 그리고 특혜적 조치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 우선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배급을 실시해왔다. 반면 일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배급제의 약화 경향 속에서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급구조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우 상시적인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차등적 배급제에서 가장 취약한 4순위에 속하는 계층의 식량위기는 언제든 현 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⁷³. 이정철,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황 분석,”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2011.5.26) 참조.

표 V-4 식량 생산량에 따른 배급량⁷⁴

순위별배급량		총곡물생산량					
		640만톤	520만톤	430만톤	280만톤		
상태		국제기준 정상량	국제기준 최소량	평년생산량 (영양부족상태)	2006년 생산량 (대량아사위기)		
식 용	1순위 100만명 5%	27만톤 1일 800g	25만톤 1일 700g	219,000톤 1일 600g		182,000톤 1일 500g	
	2순위 150만명 7%	44만톤 1일 800g	44만톤 1일 800g	383,000톤 1일 700g		274,000톤 1일 500g	
	3순위 400만명 20%	102만톤 1일 700g	88만톤 1일 600g	584,000톤 1일 400g	영양 부족	365,000톤 1일 250g	영양 실조
	4순위 600만명 30%	131만톤 1일 600g	88만톤 1일 400g	657,000톤 1일 300g	영양 실조	219,000톤 1일 100g	아사
	농민 800만명 40%	200만톤 연 250kg 1일 680g	160만톤 연 200kg 1일 547g	160만톤 1일 547g		144만톤 1일 500g	
소계		504만톤	405만톤	3,443,000톤		248만톤	
식 용 외	사료	28만톤	18만톤	18만톤		9만톤	
	종자	23만톤	23만톤	23만톤		23만톤	
	기타 공업용, 손실분	85만톤	74만톤	447,000톤			

정상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소토지 농사와 시장 활동의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아내야 했다. 북한의 취약계층은 배급 이외의 방식으로는 식량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참여 및 접근에 제약이 있는 층을 말한다. 이들은 어린이,

⁷⁴ 법륜, “2007년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겪나,” 『신동아』, 통권 569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7) 참조.

임산부·수유부, 독거노인,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장기요양환자, 그리고 장애자 등을 포함하여 약 6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계층은 식량 수급이 어렵고 불안정한 북동부 지역에 약 400여만 명, 그리고 이외의 지역에 약 200여만 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핵환자, 장애인, 그리고 고아원 및 소아과 병동 환자 등 10여만 명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⁷⁵

2002년 7·1조치는 임금과 가격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격의 현실화와 임금 인상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시장에서 배급의 부족분을 구입할 수 있게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1조치로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폐지되었고, 기업소 등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익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⁷⁶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실시된 6·28방침은 국가에 토지사용료 및 비료대금 등의 명목으로 생산량의 70%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농민이 현물로 취득하여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1조치나 6·28방침은 국가나 기업소가 최소량만을 배급하고, 나머지는 화폐소득이나 부업을 통해 시장에서 부족분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75. 김영훈, “북한 식량난 실태와 취약계층 지원 방향,”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참조.

76.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따라서 7·1조치의 임금인상은 평균주의를 없애고 작업의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임금에 반영하는 한편 성과급 임금이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노동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제가 폐지되었다... 배급제가 폐지됨으로써 북한주민은 식량 등의 생필품을 국영상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경축일에 선물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배급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특히 무상교육 제공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던 교복·교재·학용품 등 교육관련 용품까지도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1조치와 함께 국영기업의 운영 방식도 변화되어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책임경영제 시행을 통한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진승권, 『사회주의, 탈 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p. 235~236.

있다. 시장을 활용한 이 같은 시도는 북한사회 내에 시장세력의 확대와 아울러 빈부격차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북한 당국은 활용과 통제라는 이중적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북한 당국은 배급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의 확산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개입해왔다. 2005년 시장의 양곡거래 금지와 2009년 화폐개혁은 북한 당국이 시장의 확산에 대해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강제적 개입은 시장의 음성화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시장과 공식 경제, 그리고 일반 주민과 당국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사회갈등구조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계급구조는 시장화에 따라 불평등한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탈 사회주의체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구체제의 급격한 해체를 수반하는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사회갈등의 여지는 더 크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정 정도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적어도 1978년 농업국가에서 개혁·개방을 시도했던 중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장기 지속형 경제위기는 공식 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함과 아울러 배급제를 와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위기는 북한 경제가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혼재한 형태로 지속하게 만든 원인이었으며, 개인 차원의 생존 경제 활동의 증가를 초래했다.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의 사회갈등은 경제위기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배급제의 비정상적 작동 및 와해, 그리고 이로 인한 음성적,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의 기본적 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배급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들에게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가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7·1조치 이후 북한시장의 활성화 경향은 이 같은 요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급제의 와해와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는 국가와 시장 간 갈등, 간부와 주민 간 갈등, 엘리트 간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⁷⁷

시장의 확산은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유통 문제의 해소에 있어서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확산은 비공식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공식 경제부문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시장의 확산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경제 권력의 시장으로의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확산과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산계급의 형성에 대해 북한 당국은 주기적인 대응 양상을 보여 왔다. 2009년 실시된 화폐개혁은 시장자본에 대한 몰수라는 점에서 국가의 수탈을 의미하며, 확산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주민과 국가 간 갈등구조의 형성을 의미한다.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당국은 확산된 시장과 시장세력에게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도했던 상당 부분

77. 조한범, 『북한체제의 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70~81.

을 관찰했다. 그러나 화폐개혁을 통해 타격을 입은 주민들은 당국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국가가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내재하게 된다.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당국과 주민 간의 갈등관계는 보다 심화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⁷⁸

국가의 시장에 대한 비공식적 수탈구조의 형성과정에서 간부들은 부정과 부패, 뇌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개연성을 지니며, 이는 간부와 비 간부 즉, 엘리트와 주민 간의 갈등구조 형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자원의 분배가 시장이 아닌 정치적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담당하는 간부들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갈등은 간부와 비 간부인 일반 주민 간에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에서 간부라는 개념은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부들이 특권을 향유하는 한편, 자신들이 지닌 권한을 매개로 뇌물과 비공식적 착취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심화과정 및 시장화과정에서 북한관료들에 의한 부패의 확산 및 불법적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이들의 불법적 자산축적은 공적자산의 비합법적 유용, 시장유착, 그리고 정경유착의 특성을 보인다. 경제위기의 심화와 시장의 활성화라는 상황적 변화과정을 북한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자산축적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중 하부 간부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상층과 달리 일반 주민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들의 행위는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자극하며, 따라서 국가나 지도자, 또는 최고위층의 간부보다는 일상에서 접하는 중간간부들에 대해 불만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⁷⁹

⁷⁸ 조한범, “북한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03, 2010.2.4), pp. 1~2.

I
II
III
IV
V
VI
VII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체제전환 시기는 엘리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엘리트들은 이권에 대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던 권력은 새로운 경제관계의 형성을 통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시장요소가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권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권으로 부상한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엘리트 내에서도 계층분화와 아울러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는 구 기득권층의 약화와 아울러 새로운 시장구조 및 대외무역구조와 관련된 엘리트층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다. 당과 내각, 군의 전통적 엘리트들의 특권이 정체 또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남관계 및 무역과 관계하는 엘리트들은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부상한다. 대남사업 및 무역 분야의 부서 및 당·군부 강경파 간의 갈등설은 이와 같은 구조를 기초로 한 것이다.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전통적인 권력엘리트와 배급 및 자원 분배를 담당하는 실무수준의 중간간부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분배할 자원의 부족은 기존 권력엘리트와 중간간부층의 권한 약화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활수준 하락과 권위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특권을 바탕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구조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다른 보상구조를 형성하며, 이에 기반한 새로운 특성의 엘리트층을 형성시킨다. 경제위기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특권을 향유하는 집단과 소외되

⁷⁹ 조한범·양문수·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pp. 72~74.

⁸⁰ 위의 책, pp. 74~77.

는 집단 간의 괴리가 형성됨으로써, 엘리트 내 분화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최근 북한에서는 배급제 와해와 비공식적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빈부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급갈등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빈부차의 확대에 따라 사회주의 평등주의 약화와 아울러 정경유착을 통한 신흥부유층의 형성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체제전환, 그리고 시장화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특히 확산되는 시장에 기초한 빈부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¹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와 경제영역에서의 시장화, 그리고 다원주의 문화의 형성 등은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주요과제들이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시장의 확산은 자본주의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구 사회주의 계급·계층 구조의 해체와 아울러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시장화의 성공은 사적영리활동에 기초한 새로운 기업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형성에 달려있다. 이 같은 과정은 구 사회주의체제 계급·계층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불안정성과 아울러 사회적 갈등요소를 수반한다.

2002년에 실시된 7.1 경제개선 조치는 시장화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야기했다. 특히 임금과 물가의 현실화, 그리고 노동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의 7.1조치는 사적경제영역의 확대와 빈부격차 확대의 가능성을 높였다. 인센티브제에 따른 소득 격차는 자본주의체제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시장화의 추이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⁸¹ 위의 책, pp. 77~81.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의 시장세력들은 타격을 받았으나, 배급경제와 계획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북한의 시장은 존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과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은 새로운 계급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다. 가장 특징적 변화는 과거에는 제한적이거나 금기시되었던 개인경제활동의 증가이다.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 자구책의 모색과정을 통해 소상인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흥부유층은 대부분 정경유착형이며 관료가 아닌 개인 자산가의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불법적이지만 부유층간의 주택거래도 시작돼 평양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15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² 이들은 대부분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세력과 직·간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의 경우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비교적 평등체제를 유지했지만, 시장의 확산과 배급제의 붕괴 과정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 주민들이 기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반면, 부유층들은 새로운 부를 원천으로 차별화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북한체제 내에서 잠재적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는 일정한 제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노동시장 등이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시장과 사적 경제 영역들이 지니고 있는 제도적 불완전성을 권력관계와의 유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⁸² “The rise of North Korea’s new Rich,” *NK News*, November 14, 2013.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체제전환의 과정은 구조적인 경기침체 및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하향 이동과 새로운 빈부격차를 야기한다. 반면 구체제에서 축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특권층과, 이들과 정경유착을 통한 시장의 지배세력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층 분해되는 대중과 새로운 상층부 간 빈부격차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긴장상태를 야기한다. 새로운 빈부격차는 평등체제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에게 생소한 것임과 동시에 부의 축적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갈등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⁸³

3. 권력구도 재편의 영향

가. 선군정치

북한은 김일성 정권 때부터 당을 국가, 사회, 군대를 지도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로 선언했으며,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 출범과 동시에 군이 전면부각되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지도이념이자 통치방식으로 활용했다. 선군정치는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군대를 핵심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군 중심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1995년 1월 1일 124 군부대의 다박솔 초소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 등장의 배경은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경제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I
II
III
IV
V
VI
VII

⁸³ 조한범·양문수·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pp. 80~81.

인한 외교적 고립과 대외적 안보위협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 활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북핵 협상 과정에서 군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에 처한 김정일 체제가 군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통제 기능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는 결과적으로 김정일 시대 군부의 위상 강화를 초래했다. 선군정치 체제에서 군은 핵심적 기관으로서 당 보다 우월한 위상을 확보했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방위원장으로 호칭되었다는 점은 선군정치에서 군의 위상을 상징하는 사례이다. 1998년 북한의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했으며, 군부의 정치 참여가 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장됨으로써 군부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다. 군부의 위상 강화는 권력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의 군부는 제2경제 분야의 독점 및 자체 사업의 운영, 그리고 대외 무역 관여 등을 통해 경제적 이권의 핵심 부분을 장악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군부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및 강행군 등 북한체제의 위기를 선군정치를 통해 극복했다고 판단하여, 2004년 1월부터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했다. 이는 북한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정권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경제난과 안보위기에 처한 김정일 체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북한판 장기 지속형 계엄통치’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 체제에서 김정일은 군부의 물리력을 통한 정권안보 기능의 확보를 시도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군부의 위상 강화를 초래함과 아울러 권력엘리트들이 군 중심으로 개편되는 권력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대남, 대외 강경파들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반면 전문 관료 및 온건파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의 지속 등 대남 대외 강경행보는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김정은 정권 권력구도 재편

북한체제위기의 지속에 따라 군의 물리력을 통한 정권안보기능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군부의 위상 강화는 최고지도자에게 잠재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이 같은 우려는 보다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를 창안하고 활용했던 김정일은 장기간 스스로의 권력기반을 형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심복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김정일 시대를 통해 막강해진 군부의 위상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김정은이 아버지에 비해 신속하게 권력을 승계하고 권력엘리트 지형을 재편한 것은 이 같은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4월 북한의 4차 당대표자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김정은 체제의 권력지형 재편이 신속하게 일단락되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이미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한 김정은은 2012년 4월의 두 정치행사를 통해 당 제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취임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약 4개월

I
II
III
IV
V
VI
VII

만에 당·정·군이라는 북한 권력 3대 기구의 최고위직을 차지함으로써 4년에 걸친 승계기간을 경유한 김정일과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결정된 1974년에 당 정치위원, 당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적 지위를 확보했으며, 1997년 당 총비서직 취임 시까지 24년을 경유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1998년 9월이었다. 김정일은 20년 이상 권력승계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김일성 사망 당시에 이미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아버지에 비해 신속하게 권력을 승계한 이유는 권력기반의 불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장기간의 권력승계 준비기간을 통해 자력으로 인맥과 지지기반을 형성했으며, 김일성과 혁명 1세대 그룹의 지원과 더불어 권력기반을 공고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자력으로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권력재편과정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신속한 권력승계는 외형적 차원이며, 이후 권력기반의 실질적 구축이라는 본격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김정은은 신속한 권력승계 이후 군부와 노동당,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개편으로 권력지형을 재편했다. 김정은은 집권 2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군부, 노동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을 교체했다.⁸⁴

김정은의 신속한 권력승계 과정은 새로운 권력지형의 재편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두드러진 특징은 군·공안권력의 장악이라고 할 수 있다.⁸⁵ 2012년 4월에 치러진 북한의 두 중요 정치행사를 통해 김정은의

84. 2012년 68명(31%), 2013년 29명(13%)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부,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통일부, 2013.10.8) 참조.

85. 조한범, “김정은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pp. 3~4.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계의 인사들이 실세로 부상했다. 장성택은 당시 당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그쳤으나 측근 인사들이 군과 공안권력의 수장 지위를 확보했다. 장성택과 정치적 동선을 함께 해온 최룡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취임했다.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차남이자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룡해는 인민군 최고 지위인 총정치국장,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군권장악을 구체화했다.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던 김원홍이 4차 당대표자회 직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점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공안권력의 장악은 독재국가의 권력투쟁 및 정적의 제거과정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정은 체제의 신주류의 부상과 반비례하여 원로그룹과 김정일 시대 군부실세들은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⁸⁶ 4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원로인사들의 부분적 상향 인사조치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권이 없는 예우 차원에 그쳤다. 김원홍이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됨과 아울러 그동안 실세였던 우동측 1부부장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김정일은 통치기간 중 국가안전보위부장을 임명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동측은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인사였던 김영춘도 인민무력부장 자리를 넘김으로써 군 실권행사에서 멀어졌다. 김정일 시대 군부 최고 실세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북한 매체가 소개하는 인물 순위에서 최룡해 다음으로 호명됨으로써 위상 변화를 보이다가 2012년 7월 전격적으로 실각했다. 따라서 ‘김정일 영구차 호위 8인’에 포함된 인물이었던 김영춘, 리영호, 우동측, 김정각 모두 해임 또는 좌천되었다. 국방위 정치부장으로 인민

⁸⁶ 위의 글, pp. 4~5.

I
II
III
IV
V
VI
VII

군 인사에 관여했던 현철해도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아울러 새로운 권력지형이 재편되고 있으며, 군부 내에서도 신군부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정은은 기존의 원로 및 실세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나 인사 조치를 피하는 한편 군과 공간기관의 최고위 핵심 요직을 교체함으로써 권력기반 강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일 시대 군부 세력의 약화를 동반했다.⁸⁷ 당의 강조는 군부의 이권을 제약하고 당 중심으로 기득권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신주류가 군부의 기득권에 제약을 가하고 한편, 자신들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함으로써 군부세력 약화 및 당 정치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군 실세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전격적인 실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7월 단행된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인 리영호의 실각은 통상적 인사이동 및 권력교체가 아닌 숙청에 해당한다.⁸⁸ 리영호가 공개 활동 8일 만에 전격 해임됨과 동시에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은 징벌적 성격의 인사 조치로 판단된다.

⁸⁷ 김정은은 제 53회 선군절 담화에서 “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당의 역할 강화를 역설했다. 당을 ‘혁명의 참모부’로 지칭하고 ‘당의 주위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야’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기초를 선군에서 선당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일 동치 위대한 선국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5일.

⁸⁸ 조한범, “리영호 실각과 북한 권력투쟁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29, 2012.7.17), pp. 1~2.

리영호 실각 직후 김정은은 원수 칭호를 부여받음으로써 군부에 대한 확고한 장악 의지를 피력했다. 리영호의 실각은 2012년 4월 당대표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형성된 김정은 권력구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바, 김정일 사망 후 진행된 권력 재편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실세를 전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리영호를 중심으로 한 야전군 등 순수 군인 세력이 장성택계 당료파의 군 및 권력 장악과정에 반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시도가 장성택의 공안라인에 의해 저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리영호의 실각과 아울러 군 핵심 보직에 대한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등 4대 핵심 직위 전원이 교체되었다. 군 서열 2위로 군 작전을 지휘하는 총참모장은 2012년 7월 리영호에서 현영철로, 2013년 5월 김격식으로, 그리고 다시 8월에는 50대 신예인 리영길로 교체되었다. 인민무력부장도 김영춘→김정각(2012년 4월)→김격식(2012년 12월)→장정남(2013년 5월) 순으로 교체되었다. 북한군의 중요 직책 중의 하나인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2012년 4월 김명국에서 최부일로, 2013년 3월 리영길로, 그리고 8월에는 변인선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심 무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방 군단장 4명도 모두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⁹ 군 장성들의 잦은 강등과 복권은 군부 세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2012년 8월 이후 최룡해, 최부일, 김영철, 김명식, 현영철 등 군 핵심인사 8명의 계급이 강등된바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복권되었으나 일부 인사들의 복권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⁸⁹. 『연합뉴스』, 2013년 5월 13일자 기사 참조.

I
II
III
IV
V
VI
VII

빈번한 군부 인사와 신진 인물의 대거 등용으로 군부의 세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군 지휘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기존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군 장악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부상하는 군부의 새로운 핵심들은 김정일 체제에서 권력의 주변부에 해당하고 지명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세들이 포진한 노동당의 우위에 맞서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요 정책과 인사 등 국정 현안을 결정하는 노동당 정치국은 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경공업)·김기남(선전)·최태복(교육 및 과학기술)·박도춘(군수) 당비서, 후보위원들인 김양건(대남)·곽범기(계획재정)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그리고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정치국의 대표적 실세라고 할 수 있다. 후보위원들인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영일(국제)·김평해(행정인사) 당비서 등도 장성택계로 평가된다.⁹⁰

그러나 이 같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 과정은 2013년 12월 장성택의 급격한 숙청과 처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권 초기 권력 구도재편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장성택의 몰락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할 경우 이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는 필연적으로 군부의 비대화를 초래 했으며, 이는 군에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대해진 군부는 신생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은

90. 『연합뉴스』, 2013년 10월 6일자 기사 참조.

국정경험이 없는 김정은과 달리 당과 내각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았으며,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군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군부의 세력 약화과정에서 주요 군 수뇌부들이 퇴진했으며, 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권들이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것이 소위 ‘선군에서 선당정치로의 변화’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성택으로의 권력집중 및 경제적 이권의 독점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이번 숙청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실질적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리영호를 비롯한 야전세력에 대한 급격한 몰락이와 군의 경제적 이권을 접수하는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됨으로써 군의 불만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영호 실각 시 북한의 방송은 ‘리영호동지’라는 존칭을 사용했으며, 리영호를 포함하여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실세들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정보는 공개된 바 없다. 질병설이 있는 우동측을 제외하고 밀려난 대부분의 군 원로 및 실세들이 2013년 12월 김정일 2주기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김영춘, 오극렬, 그리고 현철해 등 그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북한군의 원로들이 주석단의 상단에 등장했다. 대표적인 군 강경파인 김격식도 장성택이 정치국회의에서 체포될 당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장성택 처형 이후 군의 충성대회에서도 공개 활동을 했다. 실제로 이들 군부 세력이 영향력을 상실했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의 언론은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⁹¹ 2013년 12월 24일 김정은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⁹¹ 『노동신문』, 2013년 12월 22일자 기사 참조.

I
II
III
IV
V
VI
VII

맞아 금수산공전을 참배할 당시 동행한 인물들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로 북한군 지휘부와 일선군부대 사령관들이었다. 이 같은 점은 장성택 계의 권력과 경제력에 대한 급속한 장악으로 인한 군의 반발이 장성택 숙청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전략적 사고를 지닌 장성택의 급격한 몰락은 김정일 정권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개연성이 있다. 스스로의 인맥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김정은이 단기간에 북한의 권부를 확실하게 장악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장성택의 숙청은 김정은 주도의 권력투쟁이라기 보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이 강온 권력엘리트들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김정은의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정운영 능력을 지닌 장성택이 사라진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과 아울러 권력지형 내의 2차적 분화도 예상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경험과 정치적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이 이와 같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 김정은 권력기반의 불안정성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사후 포괄적인 새로운 권력 재편을 시도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룡해를 중심으로 군에 대한 전면적인 장악을 시도했으며, 공안권력 대부분이 김정은은 물론 숙청된 장성택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모인 김경희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 김경희의 경우 김정일 시대부터 뚜렷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당 행

정부장 경험이 있는 장성택은 내각을 정비하는 동시에 권력 재편 과정의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장성택이 김정일 시대 이미 정치적 시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장성택의 급격한 몰락이 입증하듯이 그 동안 신속히 마무리된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지형 재편의 결과를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 정착에 따른 확고한 지도력의 발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김정일 사후 북한 권력실세 간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지형 재편의 완료가 아닌 권력투쟁의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부 및 원로 등 기득권층의 반발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통상 치열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교체를 노선투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정은의 권력지형 재편과 장성택계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으로써 장성택 숙청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 정권의 권력지형 재편 과정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적 경력이 일천하고 권위가 미약한 김정은이 실세들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억압하는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권력지형 재편으로 인한 지도부 내 균열 및 구심점 역할의 부재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통합력은 위기국가인 북한체제 지탱의 중요한 원천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력지형 재편과정에서 북한 권력층의 균열 및 이완은 불가피하며, 이는 김정은 정권 내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대중적 소요가 발생할 경우 과거와 같은 일사불란한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

북한사회변동 전망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는 사회변동과 혁명이론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그 과정이 아직 종료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해체와 관련된 사회변동의 평가에 대한 이론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개별국가의 내적인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변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작은 촉발요인이 단기간에 대중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발달된 정보기술에 의해 가능했다. 개별 국가의 사회변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도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두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북한체제와 김정은 정권이 다양한 문제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일의 급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 승계 과정을 마무리 했으며, 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군부의 실세들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관철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북한체제와 김정은 정권 안정성의 또 다른 논거는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식량난이나 급박한 경제위기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

I
II
III
IV
V
VI
VII

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며, 배급제의 보완을 위해 암묵적으로 묵인된 비공식적 시장이 북한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은 배급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시장구조에 적응함으로써 자생적인 생존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불만 역시 아직 체제 저항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통제력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일정 정도 자본주의 근대화를 경험했으며, 시민사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던 동유럽에 비해 북한은 다른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간 내에 북한에서는 체계적 저항운동이나 민중봉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다른 견해는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들은 북한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수반하는 의미 있는 사회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경제위기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시행된 6·28방침의 가시적 효과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개혁을 위한 근본적 조치도 발견하기 어렵다. 최근 북한은 중앙에서 관리하던 특구정책을 지방에서도 실시하는 등 외자도입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를 위한 내부자원의 고갈에 직면한 북한이 제한된 형태의 개방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재원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개방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내의 시장화 정책과 연계될 경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같이 폐쇄적인 형태로 특구를 운영할 경우, 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제자본시장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외부투자자

본과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위협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개방정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특구에 대한 국제자본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나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식량사정도 자연재해의 감소 등 부분적 영향 이외에 근본적인 개선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3년 북한 식량사정 개선과 쌀값의 상대적 안정의 주요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전략비축미인 2호창고의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업부문의 생산성이 회복되거나 외부로부터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북한의 농업문제는 비료와 농업용 전기, 연료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북한 산업 전체의 위기가 식량위기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난과 식량위기의 지속은 주민들의 불만이 형성되는 중요한 지형에 해당한다. 배급제 붕괴 및 식량난의 지속은 북한주민들이 언제든 삶의 근본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은 집단적 좌절감 형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들의 내핍을 강요하는 한편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제시는 주민들의 인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기대했던 희망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중적 불만이 급격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북한이 약속했던 강성대국의 징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3년 역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강성대국을 약속한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성의 약화와 아울러 대중적 불만

I
II
III
IV
V
VI
VII

의 심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증대되는 대중적 기대감에 비해 실제 충족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며, 이는 급격한 정치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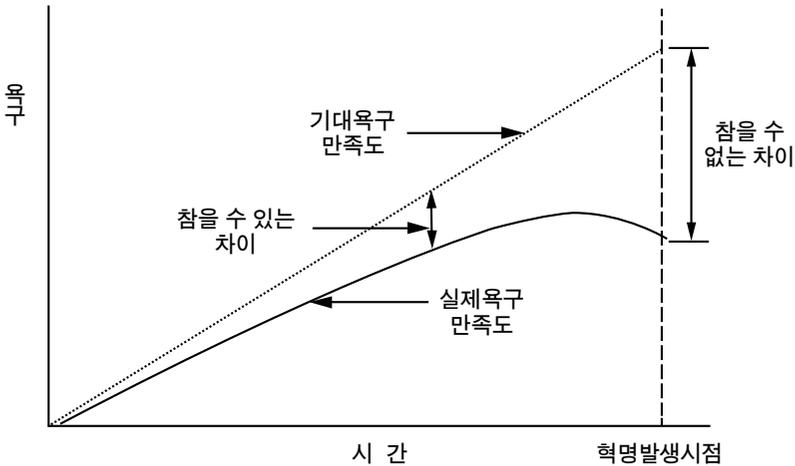
이 같은 점에서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은 배급제의 와해로 인한 불가피한 생존수단이었다. 따라서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해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에 타격을 준 것은 심각한 대중적 박탈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 약화 상황에 대해서는 데이비스(James C. Davis) J곡선이론의 적용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데이비스에 의하면 절대적인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안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혁명이나 정치변동 행위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 혁명은 어느 정도의 위기나 빈곤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향후에도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상황이 개선되는 국면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와 기대수준 역시 상승한다. 이 상태에서도 실제의 욕구만족과 기대수준 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불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요인에 의해서 실제 욕구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분노와 좌절이 표출될 개연성이 높다.⁹²

북한 당국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배급제의 위기 해소를 위해 비공식적 시장구조의 확산을 묵인함으로써 자생적인 생존경제구조의 형성을 유도했다. 배급제 붕괴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새로운 생존방식을 습득했으며, 일부의 경우 자본의 축적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배양시킬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통해

⁹²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February 27, 1962) 참조.

강제적으로 시장자본을 몰수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생계수단에 대해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욕구 만족도 간 급격한 괴리로 작용함으로써 박탈감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강제적인 화폐개혁은 대중적 좌절감과 집단적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화폐개혁의 시점은 욕구만족과 혁명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의 참을 수 없는 차이의 시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1 욕구만족과 혁명⁹³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북한체제와 당국에 가지고 있던 신뢰감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배급제 와해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개입과 타격은 체제에 대한 신뢰의 근본적 약화요인에 해당

⁹³. 위의 글, p. 6.

I
II
III
IV
V
VI
VII

한다. 김정일 시대부터 약속했던 강성대국의 조짐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으며, 김정은 체제가 선전하는 전시용 체육 및 위락시설이나 일부 특권층을 위한 시설로는 강성대국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자극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북한은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강제적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 참여 세력들은 더 이상 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화폐개혁은 당국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야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시장 활동은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음성적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세력은 북한 화폐보다는 중국의 위안화나 달러, 엔화 등 경화 위주로 자본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통제는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시장의 음성화 경향은 공식 경제의 위상을 보다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점에서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국제자본에게 북한은 투자를 하기에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을 줄 소지가 크다. 이는 북한과 특수 관계인 중국 및 한국과의 철도 연결 및 에너지 제공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 이외의 국제자본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근본적 제약요인이다. 북한이 주민과 국제사회 두 영역으로부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아울러 보다 광범위하고도 신뢰성 있는 개혁·개방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은의 등장 이후 취해진 개혁·개방 관련 조치들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⁹⁴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급제의 와해와 비공식적 시장화

⁹⁴ 조한범,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pp. 4~5.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분화는 사회갈등 및 불만의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의 경제위기로 기존 배급제의 혼란 및 시장화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화,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의 소지에 해당한다.

비공식적 시장화 과정에서 감시, 감독권을 가진 권력기관 및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거나 스스로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이 비공식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일정 정도 권력과의 연계 불가피하며, 소위 시장의 큰 손들에게 있어서 당국의 비호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음성적 시장화의 특성은 권력과 시장의 결탁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 내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산계급이 형성된다. 북한의 시장은 정경유착형 구조에 기반한 독과점체제라는 점에서 일반 주민들의 세외 부담 증가와 아울러 국가 및 중간관리층의 수탈구조를 심화시킨다. 정경유착형 신흥 부유층의 형성과 반비례하여 북한의 일반 대중들의 부담은 증가한다.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평등했던 북한사회주의 계급구조의 와해와 북한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는 간부로 불리는 북한 지배계급과 일반 주민 간 갈등적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권 이후 외형상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 김정일의 급사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정치적 카리스마와 권력기반, 그리고 국정운영 능력 모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김정은은 집권 2년 남짓한 기간에 김정일 시대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과 2인자였던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엘리트의 상당 부분을 교

I
II
III
IV
V
VI
VII

체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성을 꾀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군부와 노동당,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으로 권력지형이 재편되었으나 이 같은 움직임이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집권 2년차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측근들의 충성도를 검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특히 특수집단인 군부에 단기간에 신뢰할 만한 김정은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무리이다.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급격한 엘리트 교체는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더 크다. 특히 폭넓은 국정운영 능력을 지닌 장성택의 몰락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3년 초, 3차 핵실험과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무모한 무력시위는 김정은 국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장기간의 무력시위로 북한은 상당한 전략물자를 소비했으며, 그 결과 가시적 성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무력시위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 결국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서 북한 비핵화와에 대한 언급들과 아울러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6자 회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의 노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위상에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의 유입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계를 위한 북중 국경 월경행위를 통해 중국과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진행된 남북교류의 영향으로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발전상을 인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초코파이의 위력’은 이를 상징한다. 5만 3천 명에 달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적으

로 체험하는 동시에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상당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가족과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으며, 브로커를 통한 금품의 전달도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통해 외부 정보가 북한 내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당수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대북방송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방송을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북한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현재 230만 대에 달하는 북한 휴대전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시 급속한 정보의 확산기능을 수행할 지형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에서 아직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수반한 사회변동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가시적인 체제저항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반정부 성향의 낙서, 삐라 등 저항도 체제저항 행위의 증가와 아울러 공안관리 및 간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설은 진위여부를 떠나 아직 취약한 정권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 내부에도 체제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정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사회변동을 촉발할 수 구조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북한체제 변화 간의 차이이다. 북한의 붕괴는 김정은 정권(Regime Collapse)과 북한 정부(Government Collapse)차원 두

I
II
III
IV
V
VI
VII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국가 및 체제 전반의 동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이와 같은 구분에 기초한다.⁹⁵ 그러나 제반요인을 고려할 경우 단기기간에 북한 정부 및 국가 차원에서 무정부 상태에 이르는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동유럽과 달리 시민사회적 전통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체제 저항적 성격을 지닌 집단행동의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체제저항을 지도할 수 있는 저항엘리트의 가능성에서도 북한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북한체제 불변론의 유일한 논거일 수는 없다. 동유럽 및 재스민 혁명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체제 내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촉발요인으로 체제붕괴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에서 루마니아 사례의 경우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 부족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에서 루마니아와 북한은 유사성이 있다. 아울러 양 사회 모두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경사라는 점에서도 공통성이 있다. 루마니아 체제 붕괴의 경우 외형상 견고해 보이는 체제가 사소한 계기로 단기기간에 최고지도자의 유혈 교체라는 극단적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민중봉기 이후 다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지속으로 인한 혼란과 민주화 및 시장화 과정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시민사회적 요소가 미약한 루마니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루마니아는 다른 동유럽과 달리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경험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시민사회적 요소의 발현에 있어서도 제

⁹⁵-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Washington D.C.: RAND Corporation, 2013), pp. 5~6.

약이 있었다. 아울러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철권통치를 지속했다. 지배엘리트 일가의 특권 향유와 반비례하여 일반 주민의 생활은 궁핍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통제에 기반한 외형상의 안정성에 비해 루마니아 국민의 내적인 불만과 체제에 대한 신뢰의 근본적 철회라는 내적인 위기는 심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특정한 촉발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현재화됨으로써 최고지도자의 유혈 제거라는 극단적 사례로 귀결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차우세스쿠 이후 루마니아 사태의 전개과정이다.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구조적 환경 및 대체 엘리트 집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급격한 교체는 일리에스쿠라는 새로운 권위주의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은 많은 면에서 루마니아와 유사성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등장 이전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간을 경유함으로써 자발적 근대화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성립 이전 자발적인 자본주의 근대화 경험을 가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분단 이후 사회주의 방식의 근대화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시민사회적 맹아를 형성할 계기를 갖지 못했다. 북한이 자랑하는 스탈린주의 사회주의 공업화도 1960년대 말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 같은 위기는 해외차관 도입을 통한 해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중진 공업국 수준에서 북한은 성장 한계를 노정했으며, 1980년대 말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위기국가로 전락했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지속과 3대 세습으로 인한 정권 정통성의 약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의 등장과 단기간에 걸친 급속한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지표일 수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북한 변화를 위한 자원과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I
II
III
IV
V
VI
VII

이는 정치변동과 사회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북한체제 및 국가의 위기와는 차별성이 있다. 김정은이라는 권위당국자(Political Authority)의 위기는 북한체제 및 국가의 위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김정은 정권 차원의 변화에 대해 북한체제 및 국가 차원의 새로운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식량폭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체제변화의 전망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며, 지배체제 내에서 변화를 자극하는 제한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혈사태를 수반하는 긴박한 상황의 도래도 지배체제 내에서의 권력교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구조적인 변화와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비조직적이고 돌발적인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물리적 통제기구, 즉 군부와 보안조직에 대한 장악세력은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궁정쿠데타의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엘리트집단 내의 권력교체 성격을 넘기 어렵다. 궁정쿠데타가 성공한다고 해도 체제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구조는 만성화되어 갈 것이며, 이는 북한 내부의 부문별 통합 상태를 점차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배집단의 경우도 과도기적 통제를 위해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통제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권위의 의인화가 극도로 강화된 북한정치의 특성상 새로운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상응하는 카리스마를 가질 수 없으므로,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는 신권화된 북한 정치권력과 권위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엘리트 간의 정권교체는 사회적 저항의 상쇄를 위해 상응하는 가시적 개혁 조치와 획기적 대북 지원을 전제로 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과

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점차 체제차원에서의 변화의 특징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⁹⁶

루마니아 사례에 입각한 북한체제의 변화 시나리오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조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체제에서 생존문제와 관련된 민중봉기의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는 김정일 정권 시기부터 지속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계기가 심각한 유흔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군의 본격적 개입 상황을 의미하나 군 엘리트의 급격한 교체로 인한 군심의 이반 및 구심력 약화는 군의 대응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군의 위상 격하와 잦은 물갈이, 그리고 신주류에게 군의 기득권이 전이되는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체제위협 상황을 막는데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루마니아 사태와 같이 정권 근위대와 야전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리력을 장악한 야전군의 승리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운동이나 반체제 엘리트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변화는 루마니아 사례와 유사한 긍정쿠데타 형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의 지배체제의 종식과 아울러 물리력을 담보로 한 신지배체제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구체제에 기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요소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화와 시장화의 추진에 한계를

⁹⁶ 조한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143~144.

I
II
III
IV
V
VI
VII

노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지배체제 역시 루마니아의 사례와 같이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방식의 통제 메커니즘을 지속할 개연성을 의미한다. 북한체제의 급격한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우려하는 중국은 새롭게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일정한 지원과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수반된다고 해도 시민사회적 요소의 결핍 및 대체 엘리트층의 형성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시장화와 민주화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이는 이미 루마니아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화와 민주화는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지원과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특히 분단체제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김정일의 급사와 준비되지 않은 김정은 정권의 탄생과 아울러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강력한 통제와 감시체제의 작동을 통해 적어도 외견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목도되고 있는 다양한 북한사회의 갈등 양상들이 체계적인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들로 발전할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아직 맹아적 수준에 있는 시민사회의 발달 수준과 저항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대체 엘리트집단의 부재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제약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급제의 붕괴를 포함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다.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따르는 변화과정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과 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다. 가장 특징적 변화는 과거에는 제한적이거나 금기시되었던 개인 경제활동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개인들은 생존경제 차원에서의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의 요소들이 증가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체제전환의 과정은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복지체제의 와해, 노동시장의 재편과정을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하향 이동과 새로운 빈부격차를 야기한다. 궁핍화로 인해 하층 분해되는 대중과 정경유착형 신흥부유층 간의 빈부격차는 사회적 긴장상태를 야기한다. 부의 축적의 정당성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신흥부유층의 생성은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구조적인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비전의 제시와 체계적인 개혁·개방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에 해당한다. 북한주민들

I
II
III
IV
V
VI
VII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강성대국이라는 신기루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초 3차 핵실험과 무모한 무력시위 등은 김정은 국정운영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징적 사례였다. 집권 2년 남짓한 기간에 군 수뇌부를 비롯한 북한 지배엘리트의 대폭 교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교체 인물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의 물갈이는 김정은 정권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히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북한 군부 및 원로 층의 향후 대응도 주목할 대상이다.

현재 북한에서 체계적인 저항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양한 갈등적 요소들의 증가 및 불만의 축적에 따라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경우 선대에 비해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강온파 엘리트집단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에 비해 정치적 능력과 국정운영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이 북한 지배엘리트의 갈등을 관리하거나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동구권 국가들은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붕괴했다. 특히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대중적 불만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영정 편저.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서울: 현암사, 1988.
-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형중·조한범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_____.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3~2002년)』. 서울: 북한연구소, 2003.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 이상환·김웅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 2008.
-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파주: 한울, 2012.
- 이향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1994.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조한범. 『북한체제의 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한범·양문수·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진승권. 『사회주의, 탈 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최완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테다 스카치폴 저·한창수·김현택 역. 『국가와 사회혁명』. 서울: 까치, 1981.
- 통일부 정보분석실. 『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서울: 통일부, 1999.
- 황병덕 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가 한반도 통일』.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사)남북언론연구회·RFC 자유조선방송. 『대북방송백서 2013』. 서울: (사)남북언론연구회·RFC 자유조선방송, 2013.

- Bennett, Bruce W.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Washington D.C.: RAND Corporation, 2013.
- Gurr, Ted R. *Why Men Rebel*. Herndon: Paradigm Publishers, 2011.
- Kuran, Timur. *Private Truths, Public Lies: The Social Consequence of Preference Falsifica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Lauer, Robert H. *Perspective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7.

2. 논문

- 권영경.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수은북한경제』. 2012년 가을호 (한국수출입은행), 2012.
- 김상철.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민화협 정책위원회), 2003.
- 김영훈.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 및 농업.”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법륜. “2007년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겪나.” 『신동아』. 통권 569호 (동아일보사), 2007.
- 양문수.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 _____.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은구. “폴란드·루마니아 탈사회주의 정치변혁의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동유럽』. 제2권 2호 (서강대 국제지역문화원), 2011.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창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5.
- 조한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가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남북 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통일연구원), 2002.
- Davi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February 1962.

- Glinkina, S.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 Goldstone, Jack A. “Theories of Revolution: The Third Generations.”
World Politics. Vol. 32, April 1980.
- Grossman, G.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32, No. 5, 1977.
- Hankiss, Elemer. “The Second Society: Is there a Second Special
Paradigm Working in Contemporary Hungary?.”
Diagnosis. Vol. 2, 1986.
- Kricheli, Ruth., Yair Livne and Beatriz Maganoli. “Taking to the
Street: Theory and Evidence on Protests under Authoritarianism”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August 15, 2011.

3. 기타자료

『노동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프레시안』.

『NK조선』.

- 조한범. “북한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03, 2010.2.4.
- _____.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03, 2012.1.9.

- _____. “김정은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23, 2012.5.11.
- _____. “리영호 실각과 북한 권력투쟁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29, 2012.7.17
- _____.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4, 2012.12.28.

김영훈 외.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2011.5.26.

박동호. “방북단 사건, 남한의 현실, 미국 테러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생각: 북한은 지금 한류(韓流)열풍, 돈 열풍.” 『keys』. 2001년 10월호.

안드레이 란코프. “北 체제전환 후 종교부흥 가능성 높다.” 『Daily NK』. 2005년 5월 1일.

_____. “The rise of North Korea’s new Rich.” *NK News*. November 14, 2013.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5일.

통일부.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통일부 자료, 2013. 10.8.

T. Корягина. “Теневая экон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 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3, 1990.

Б. Н. Казанцев. ““Частник” в сфере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ОЦИС* No. 11, 1993.

А. В. Крылова. “Лабирантах теневой экономики.” *Предпрни матель* No. 12, 1992.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들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일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l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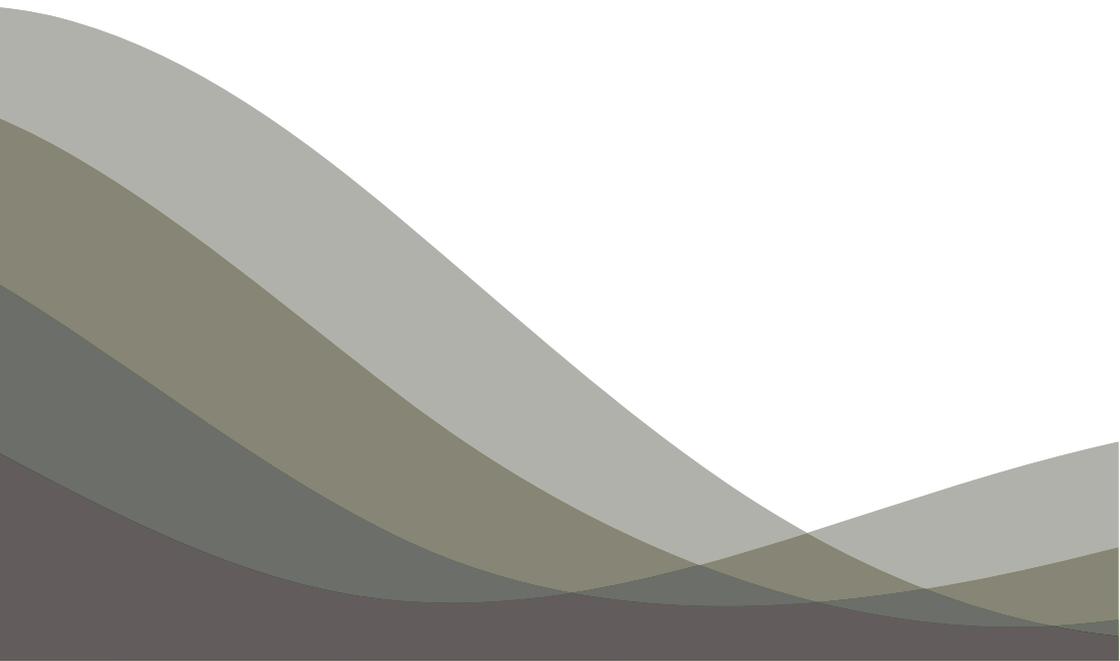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9 788984 797352

ISBN 978-89-8479-735-2